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 김주리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 연구책임자

이재영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김주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남북관계 2023: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1/5년차)

남북관계 2023: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평화협력

KINU 연구총서 19-04

---

발행일 2019년 12월 30일  
저자 이재영, 김주리  
발행인 임강택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평화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인쇄처 (주)계문사(02-725-5216)  
ISBN 978-89-8479-964-6 93340  
가격 8,000원

---

© 통일연구원, 201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차례

요약 .....	7
<b>I. 서론 .....</b>	<b>13</b>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5
2. 연구내용 및 방법 .....	19
<b>II.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 내 논의 .....</b>	<b>23</b>
1. 평화협정 당사국 문제 .....	27
2. 한미 양자동맹에서 다자안보체제로의 전환 .....	36
3.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의 관계 설정 .....	46
4. 평화협정의 보증문제: 유엔사의 기능 조정 및 협정 감시 집행기구 설치 .....	51
5. 소결 .....	57
<b>III.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 내 논의 .....</b>	<b>59</b>
1.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와 역할 규정 .....	62
2. 한미/북중 양자동맹에서 다자안보체제로의 변환 혹은 병행 .....	70
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관계 설정: 선후관계와 상응조치의 등가성 .....	86
4. 평화협정의 이행담보와 한반도 통일: 감독 집행기구·분쟁 되돌리기(Rollback, 争端回卷) 기제 확립과 중국의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지지 .....	98
5. 소결 .....	103

<b>IV.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중 입장 비교와</b>	
<b>미중관계</b> .....	109
1. 평화협정 당사국 문제: 당사국 지위와 역할 규정 .....	111
2. 한미/북중 양자동맹에서 다자안보체제로의 전환 혹은 병행 .....	114
3.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의 관계 설정: 새로운 계산법의 가능성 .....	119
4. 평화협정의 이행담보: 유엔사 해체 문제와 평화협정 감독 집행기구 설치 .....	123
5. 소결 및 미중관계에 대한 함의 .....	127
<b>V. 결론</b> .....	135
1. 대미 협력 방안 .....	139
2. 대중 협력 방안 .....	145
3. 한미중 협력 방안: 한미중워킹그룹회의의 체계화와 정례화 .....	149
<b>참고문헌</b> .....	154
<b>최근 발간자료 안내</b> .....	161

## 표 차례

〈표 I-1〉 위탁연구기관 및 담당업무 .....	21
〈표 III-1〉 북한 당국과 언론의 한미군사연습 비난과 남북관계 악화에 관한 성명·보도 .....	74
〈표 III-2〉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선후 관계에 대한 북미 간 시기 별 입장차이 .....	93
〈표 III-3〉 종려 공동행동계획과 북한의 접근방식 비교 .....	94
〈표 IV-1〉 한반도 평화체제 쟁점에 대한 미중의 입장 비교 .....	130



## 요 약

---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 관련국들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을 주요 이슈별로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도출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국제적 협력 도출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에게 각각 의뢰하여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2018년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서 발표된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타협 가능성을 논하고 평화협정 체결 및 이행을 위한 대미·대중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평화협정 시안은 각각 미국 스티imson센터(Stimson Center)내 38노스(38 North)와 중국 푸단대학교(復旦大學) 한국학센터에서 맡아 작성하였다.

우선 평화협정 당사국 문제에서 미중 입장의 쟁점은 중국의 당사자 지위에 대한 분명한 의견 표명이고, 6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러시아와 일본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와 남과 북의 법적 지위 문제이다. 그리고 한미·북중 양자동맹에서 다자안보체제로의 전환의 주제에서 쟁점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조정 문제이다. 미국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조정과 거취를 자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미의 의

지에 달린 것으로 보는 측면이 강한 반면, 중국 측은 남북관계의 화해와 발전 상황 속에서 한미군사훈련의 조정을 인식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 다자기구에 대한 필요성은 둘 다 인정하지만 그 목적과 의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미국은 주로 자신의 미사일 방어체제와 군사력 확대 수단과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중국은 미일 세력 견제와 미국 주도의 한반도 질서 형성 방지와 같이 주로 미국을 의식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를 원한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관계 설정과 관련하여 미중 간 쟁점이 되는 것은 북한에게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중국의 쌍궤병행 방안 혹은 그와 유사한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그리고 평화협정의 이행담보와 관련하여 미국 측에서는 유엔사 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입장은 유엔사 폐지와 함께 새로운 평화협정 감독 집행 기구 설립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중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유엔사 문제를 한반도 평화체제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평화협정의 당사자이자 비핵화의 촉진자로서 쌍궤병행과 쌍중단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발전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이행 방안을 공동연구하고, 양국 정상과 고위급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통해 이러한 방안의 실효성과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미중의 이러한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 한미중 소다자 협의체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중 국제협력을 정례화·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한미동맹, 유엔사, 한미관계, 한중관계

# Abstract

##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Buil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Lee, Jae Young and Kim, Juri*

It is not at all an easy task to change the armistice agreement to a peace agreement and buil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not only because the defini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vary, but also because the political stance and interests of the nations relevant to the peace regime are not alike. What is particularly essential is cooperation of the U.S. and China.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reviews the positions of the U.S. and China about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sue by issue, with the aim of identifying measures to draw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on the peninsula, based on which the study proposes future policy tasks and directions.

As a preliminary work for heighten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terests in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acilita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 joint international study has been performed. Specifically, a request

was made to the U.S. and Chinese experts to create a draft of the peace agreement, and those draf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draft peace agreement for the Korean Peninsula” presented in the 2018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Forum, “Three Questions on Peace.” This allowed to discuss possible compromises that can be made on main issues and suggest the ways to cooperate with the U.S. and China to conclude and implement the peace agreement. The U.S. and Chinese draft versions were each developed by 38North in the Stimson Center and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Fudan University.

Regarding the matter of parties to the peace agreement, the main issues are: clear expression of opinion by China about the status of the party to the peace agreement; whether to include Russia and Japan, the two nations involved in the six-party talks, in the peace agreement; and the legal statu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theme of conversion from bilateral Korea-U.S. and North Korea-China alliances into a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the main issue is changes to be made to the Korea-U.S. alliance 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Washington views an adjustment and future move of the Korea-U.S. alliance and USFK as part of its East Asia strategy and as a matter of commitment made by the U.S. and South Korea, while China expects Korea-U.S. military drills to be adjusted corresponding to reconciliation and advanc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U.S. and China both recognize the necessity of creating a multilateral Northeast Asian security organization but show differences in terms of its objective and intention. The U.S. wants the multilateral security organization not to conflict with the expansion of its missile defense system and military capabilities meanwhile China desires to build it in a way to expand its own sway and check the U.S. and Japan as well as to prevent the U.S.-led formation of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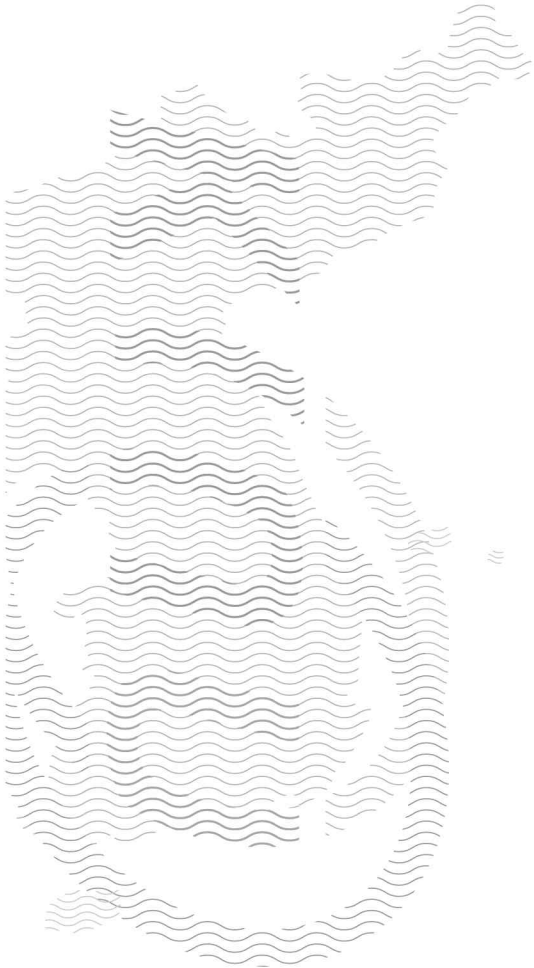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in denuclearization and peace agreement, the relevant issue is whether the U.S. would accept the Chinese solution of simultaneous pursuit of denuclearization and negotiations for a peace regime, which has achieved a certain level of persuasion from North Korea, or a new, similar calculu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guarantee of the peace agreement, the U.S. emphasizes the need to maintain the United Nations Command, but China argues for the abolition of the UN Command and establishment of a new supervisory organization on the execution of the peace agreement.

Lastly, as the gaps in the positions taken by the U.S. and China are confirmed, with the U.S., specific cooperation measures are necessary on how to link the Korea-U.S. alliance and UN Command with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China, the party to the peace agreement and a facilitator for denuclearization, joint studies need to be

carried out to formulate more specific and advanced ways to implement the peace agreement and denuclearization, beyond the two Chinese solutions—halting U.S.–South Korea joint military exercises in return for Pyongyang stopping its nuclear and missile tests and a simultaneous pursuit of denuclearization and negotiations for a peace regime. The head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and their high-level officials should have more effective strategic communication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those measures. In conclusion, in order to enlist cooperation from the U.S. and China, a Korea–U.S.–China consultative body should be established to hold regular meetings about, and institutional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peace regime.

**Keywords:**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OK–U.S. alliance, UNC, ROK–U.S. relations, ROK–China relations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 관련국들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sup>1)</sup> 또한, 인류역사상 유래 없이 장기간 지속된 한반도 정전체제와 북한 핵문제로 인한 평화체제와 비핵화 문제의 긴밀한 연관성,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단순히 한국과 북한의 양자적 입장에 국한하여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sup>2)</sup>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을 주요 이슈별로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도출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한국정부가 정의하는 평화체제란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간에 공식적으로 전쟁상태를 종식시킴으로써 법·제도적 및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sup>3)</sup> 이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으로 한반도에 수립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비핵화 등을 통해 한반도에

1) 이태환, “미국, 중국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종정책연구』, 제5권 제1호 (2009), p. 166.

2) 도경옥, “중전선인과 평화협정 2단계 구상의 의미와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9), p. 28.

3) 대한민국 외교부, “한반도평화체제,” <[http://www.mofa.go.kr/www/wpge/m\\_3982/contents.do](http://www.mofa.go.kr/www/wpge/m_3982/contents.do)> (검색일: 2019.9.28.).

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평화협정의 체결 행위가 국제법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는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평화협정이 분쟁의 종결과 화해의 공존을 제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게 하는 법적, 정치적 장치를 포괄하는 합의문이라고 보는 시각과 일맥상통한다.<sup>4)</sup> 평화체제의 개념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혹은 ‘평화메커니즘(peace mechanism)’과 같은 여러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평화협정’과 비교하여 ‘평화체제’와 ‘평화메커니즘’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협상 대상을 미국과 북한 간 양자적 측면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닌, 한국과 중국, 혹은 러시아와 일본까지도 포함하는 다자적 측면으로 확대할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sup>5)</sup> 본 글의 목적이 개념의 해석과 정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세 가지 용어가 교차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는 과거 남북한과 주변 관련국이 참여했던 4자 혹은 6자회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주제이다. 1999년 8월 5일부터 9일 간 중국을 의장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4자회담에서 미국, 중국, 남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개의 긴장완화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한반도의 상황에 적합한 긴장완화 조치들과 향후 수립될 한반도 평화체제의 윤곽(measures to reduce tension that fi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xplored

4) 정한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쟁점과 전망,” 『통일문제 연구』, 제30권 제2호 (2018), pp. 155~156.

5) Emma Chanlett-Avery et al.,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April 19, 2018, <<https://fas.org/sgp/crs/row/R45169.pdf>> (Accessed September 27, 2019).

further the outlines of a future peace regime)’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4자는 긴장완화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켰다(In the subcommittee meeting to discuss to establish a peace regime, the parties taled their respective ideas. Such an exploration helped deepen the mutual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posi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고 밝혔다.<sup>6)</sup>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는 이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남북한이 참여한 2005년 6자회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2008년 6자회담의 중단과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북미관계가 경색되고 동북아 내 군사적 긴장이 증가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sup>7)</sup> 한반도 평화체제는 6자회담이 중단된 후 약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2018년에 와서야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할 것”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6·12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도 이어져, 트럼프(Trump)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하고 안정적인

6) 대한민국 외교부, “[4자회담 관련문서] 제6차 본회담 공동 언론 발표문,” 2016.9.27., <[http://www.mofa.go.kr/www/brd/m\\_3984/view.do?seq=36200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http://www.mofa.go.kr/www/brd/m_3984/view.do?seq=36200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 2019.9.28.).

7) 황지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1호 (2019), p. 70.

평화체제(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를 만들어나가기로 약속했다. 2008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2018년 두 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8)</sup>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보장을 위한 국제적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시도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서는 한국전쟁 참여국이자 정전협정 서명국인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협조를 도출해내기 위해 두 국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두 국가의 협력 방안을 고안함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 측에 평화체제에 대한 우리의 의도와 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주요 이슈별 입장을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평화협정 체결 및 이행을 위한 대미·대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8) 위의 글, p. 69.

## 2. 연구내용 및 방법

### 가. 주요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 장(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내용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에 있어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공동연구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II장과 III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한 미국과 중국 내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이슈에는 우선 평화협정 당사국 문제가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이 교전당사자인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의 4자 형식이 될 것인지, 한국, 북한, 미국 혹은 종전협정 체결국만을 포함하는 3자 형식이 될 것인지, 일본, 러시아가 협정 보장국으로서 참여하는 6자 형식이 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두 번째 이슈는 한미동맹에 관한 이슈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한미동맹의 역할과 범위가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을 대체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 안보 기구의 설치 및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세 번째 이슈는 북한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간 관계 설정에 대한 것이다.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의 형식으로 갈지,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의 형식으로 갈지에 대한 관련국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문제로 항상 거론되고 있다. 이 문제는 북한 비핵화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지, 미국이 주장하는 일괄타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평화협정의 보증문제가 있다. 현재 정전체제를 관리, 감독하는 기구로서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이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재정립될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으며, 새로운 감독집행 기구 설치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II장은 위의 쟁점들에 대한 미국 내 논의들과 전문가들의 입장을 소개, 분석하고, III장은 동일한 형식으로 중국 내 논의들과 전문가들의 생각을 정리, 분석한다.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 내의 의견이 수렴하는 부분과 대립하는 부분을 비교·분석하여 사안별로 미중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한국의 대미·대중 협력방안에 대해 도출하여 향후 한국정부의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시도한다.

위의 쟁점들 중에서 미국과 중국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혔거나 양국 사이에 확실한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쟁점은 유엔사의 지위와 북한 비핵화 문제이다. 이는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있어 위의 두 이슈가 국제적 차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동시에,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 방안 모색 시 유엔사와 비핵화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한다.

## 나. 국제공동연구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국제적 협력 도출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에게 각각 의뢰하

여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을 작성하도록 하고,<sup>9)</sup> 이를 2018년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서 발표된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과 비교·분석하였다.<sup>10)</sup> 이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논하고 평화협정 체결 및 이행을 위한 대미·대중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평화협정 시안은 각각 미국 스티imson센터(Stimson Center)내 38노스(38 North)와 중국 푸단대학교(復旦大學) 한국학센터에서 맡아 작성하였다.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연구진은 아래와 같다.

〈표 1-1〉 위탁연구기관 및 담당업무

	연구기관	참여연구진	담당역할
미국	스티imson센터&38노스	Joel S. Wit	위탁 책임
		Leon V. Sigal	위탁 공동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학센터	Zheng Ji Yong(郑继永)	위탁 책임
		Yu Shao Hua(虞少华)	위탁 공동
		Gong Ke Yu(龚克瑜)	위탁 공동
		Li Nan(李楠)	위탁 공동
		Wang Jun Sheng(王俊生)	위탁 공동
		Wang Xing Xing(王星星)	위탁 공동

이와 같은 국제공동연구 방식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국제적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위 두 기관의 의견이 미국과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거나, 각 국가 내 전문가들의 종합적 관점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극복

9) 본 연구에서는 두 시안의 명칭을 각각 ‘미국 측 시안’과 ‘중국 측 시안’으로 하되, 이 시안들이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시안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10)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자료, 2018.12.12.), pp. 31~48.

하기 위해 본 연구는 위탁연구 결과를 한국, 미국,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논의들과 함께 비교·분석하는 방식을 택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4가지 이슈에 관한 조항을 한국, 미국, 중국 측 시안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교하였다. 그리고 기존 문헌과 미국과 중국 현지의 연구기관과 정부부처 발표 등을 조사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두 국가 내 다양한 견해들을 취합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평화협정 주요 관련국인 중국과 미국의 연구진이 직접 작성한 평화협정 시안과 이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바탕으로 대미, 대중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 II.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 내 논의





그동안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지만, 과거 북미 간, 혹은 한미 간 발표된 공동성명을 통해 평화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2000년 10월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의 방미 결과로 2000년 10월 12일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콤포뮈니케’에서 양측은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고 밝혔다.<sup>11)</sup> 비록 평화체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위의 공동성명은 그동안 평화협정에 가장 근접했던 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sup>12)</sup> 2005년 11월 17일 발표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 하에,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 정전체제로부터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화해와 평화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sup>13)</sup>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북한 역시 미국이 북한의 평화체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해왔다.<sup>14)</sup> 일각에서는 한반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콤포뮈니케(U.S.-D.P.R.K. Joint Communique), 2000.10.12. 재인용: 박주화·윤혜령 편집,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01 평화·비핵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111.

12) 이인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과 대책,”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2008), p. 12.

13)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2005.11.17. 재인용: 박주화·윤혜령,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01 평화·비핵화』, p. 34.

도 평화체제 구축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면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15)</sup> 그러나 미국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지와 미국의 입장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주요국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재활성화 되면서 미국 내 전문가들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이 갖는 여러 정치·경제적 파급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일부 이슈들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지만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본 장에서는 주요 이슈별로 미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들과 전문가들의 입장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예측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14) 일레로, 2010년 2월 7일자 『노동신문』의 논설, “조선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에서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데 대해 여러 번 표명 하였으며 조선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할 용의도 내비친 바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선반도정세와 조미관계에서 전환적 국면이 열릴 것이다”고 밝혔다. “조선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 『노동신문』, 2010.2.7. 재인용: 염규현, “미국의 <QDR 2010>과 전략적 유연성: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과 전략적 유연성 - 북미 이해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지나,” 『민족21』 (서울: 민족21, 2010), p. 76.

15) 조성렬, 평화재단 전문가포럼 발제문, 2010.2.9. 재인용: 염규현, 위의 글.

## 1. 평화협정 당사국 문제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은 평화협정 당사국 문제이다.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문에 서명한 당사국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지, 북한의 과거 주장처럼 실질적 당사자론에 따른 미국과 북한, 즉 양자 간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이 주장하는 당사자 원칙에 따라 한국을 포함하는 남북한 양자,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와 더불어 중국까지 포함한 4자가 서명국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 측 시안은 김상기 외의 시안과 마찬가지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4국을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으로 설정했다.<sup>16)</sup> 이는 2018년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북미 간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전협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반도의 휴전 상태의 근원은 1953년 7월 23일 한국전쟁을 중단하면서 체결된 군사정전협정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전의 정전협정은 판문점에서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웨인 클라크(Wayne Clark),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정전 협정문에 최종적으로 서명하면서 체결되었다. 이는,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1953년 당시 군사정전협정에 서명했던 다른 서명국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제도적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sup>17)</sup> 그러나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은 이 부분에

16) 미국 측 시안, pp. 34~35.

17) 조찬래,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사회과학연구』, 제18권 겨울호 (2007), p. 162.

서 국제법적·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한다. 2018년 이후 남북, 북미관계의 개선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면서 종전선언 역시 한국, 북한, 미국을 중심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문제는,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이 법적인 전쟁의 종료 방식으로서의 종전선언이 갖는 법적 성격과 효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sup>18)</sup>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한국, 북한, 미국이 각각의 양자협상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정치적으로 합의하더라도 다른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합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협정에 불참할 경우 평화협정의 법적 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1960년대 초반부터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sup>19)</sup> 이후, 1972년 1월 10일 김일성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기자들과 대담을 하면서 정전협정을 남북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북한의 제안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sup>20)</sup> 북한의 취지는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73년 ‘조국통일 5대강령’ 발표 이후, 북한의 평화체제 당사국에 대하여 북한은 남북 간 양자 체결이 아닌 북미 간 체결로 입장을 바꿨다.<sup>21)</sup> 이듬해 1974년 3월 2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 회의에서 북한은 북미 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안을 채택했다. 미국은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에 입각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관한 한 남북한의 직접적인 참여를 지지해왔으며, 북

18) 도경욱,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2단계 구상의 의미와 과제,” pp. 39~40.

19) 김일성이 1962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이래, 북한은 지속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정한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쟁점과 전망,” p. 158.

20) 임수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한국정치연구』, 제18집 제2호 (2009), p. 56.

21) 위의 글, p. 66.

한의 북미 간 양자 협정 방식에는 반대를 표명해왔다.<sup>22)</sup>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회담에는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sup>23)</sup> 이후, 1984년 1월, 북한이 남한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제안하면서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 불가침 선언을 제안하였으나, 미국은 응하지 않았다.<sup>24)</sup>

현재 김정은 정권이 평화협정 체결에서 한국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는 해석과, 여전히 북미 양자 간 평화협정 체결을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다는 해석이 병존한다.<sup>25)</sup> 전자와 같은 해석은 2018년 2차례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이를 통해 채택된 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이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을 통해 과거와는 달리 평화협정 당사자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후자의 해석처럼, 엄밀한 의미에서 김정은 정권이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국으로서 한국을 인정했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그리고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주장한 이래,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같은 전제 조건 없이 북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왔다.<sup>26)</sup> 일례로, 2016년 3월 한국 정부가 통일부 대변인 발언을 통해

22) 이인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과 대책,” p. 12.

23) 신옥희,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한국외교사논총』, 제33집 2호 (2012), pp. 38~40.

24) 위의 글, pp. 43~44.

25) Emma Chanlett-Avery et al,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p. 9; 윤정원·나영주,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관한 미·중의 전략적 입장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5집 제2호 (2017), pp. 141~147.

26) 윤정원·나영주, 위의 글, pp. 142~143.

평화협정이 북미 간 문제가 아니며 한국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북한은 3월 1일 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이 생각하는 협정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임을 분명히 했다.<sup>27)</sup> 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과는 달리,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과거 행정부들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화협정을 북한과 양자 간 체결할지, 한국과 중국이 서명국으로서 참여할지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법적으로 중국과 한국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지만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There’s a question as to whether or not we’re supposed to or whether or not we legally have to. I don’t care. I think it would be great to have China involved and also, of course, south Korea).<sup>28)</sup>

미국 내에서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국제법적 측면보다 정치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사안은 북미관계의 정상화 문제이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평화협정 당사국 이슈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사안이 북미 관계정상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만약 미국이 평화협정 당사국으로 참여할 경우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정권 초기 이례적으로 단기간 내에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결정하며 대북 협상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정상화에 대한 의지

27) 『조선중앙통신』, 2016.3.1. 재인용: 위의 글, p. 145.

28) White House, “Press Conference by President Trump,” June 12, 2018, <<http://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press-conference-president-trump/>> (Accessed October 14, 2019).



를 보이더라도 미국 상원에서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북미 관계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sup>29)</sup> 또한 평화 ‘협정(agreement)’이 아닌 ‘조약(treaty)’을 요구하는 주장이 미 의회를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외국에서 조약을 체결할 경우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의회가 협상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sup>30)</sup> 만약 조약을 체결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외교적 관계를 복원할 수밖에 없고 이는 행정부 입장에서 많은 국내정치적 비용을 치러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정치적 비용을 생각하여 조약 대신 협정을 체결하거나, 조약을 체결하되 미국이 공식적인 조약 서명국에서 스스로를 제외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만약 미국정부가 북한과의 경제적·정치적 관계정상화가 미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과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북미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sup>31)</sup> 즉,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가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더 넓게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틀 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sup>32)</sup> 북한은 그동안 북미관계의 전면적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대북 적대정책 중단과 북미 관계정상화를 요구해왔다.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

---

29) Clint Work,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Not So Fast," *The Diplomat*, April 21, 2018, <<https://thediplomat.com/2018/04/a-peace-regime-on-the-korean-peninsula-not-so-fast/>> (Accessed September 27, 2019).

30) 미국 측 시안, p. 10~11.

31) 조찬래,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p. 162.

32) 위의 글, p. 162.

이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기 전까지 평화협정 체결에 선뜻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측면에서 또 다른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사안은 미중 갈등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군사정전협정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해야 할 경우 현재 참여하게 대립, 갈등하고 있는 미중관계가 평화협정 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미중 간 협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당시 북한에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제시했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제외한 종전선언에 반대했다고 알려졌다.<sup>33)</sup>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현재 증가하고 이는 미중 갈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중국의 협정 참여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요구를 수용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sup>34)</sup>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경우, 미국과 중국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일부 영역에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선불리 중국을 협정 당사국에서 제외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sup>35)</sup>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될 경우 정전협정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고, 중국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If we do this well, we will have signed a peace treaty that ends the armistice, and China will

---

33) “트럼프,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제안...김정은 중 포함” 맞서 무산.” 『동아닷컴』, 2019.7.30.,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731/91312834/1>> (검색일: 2019.9.27.).

34)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 “중, 종전협정 평화협정에 당연히 참여”, 『한국경제』, 2019.7.11.,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71054341>> (검색일: 2019.9.29.).

35) 미국 측 시안, p. 10.

be part of that).<sup>36)</sup>

평화협정 당사국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중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를 구분할지와,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를 구분할지에 따라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sup>37)</sup> 앞서 논의한 평화협정 체결국에 대한 내용이 전자와 관련되어 있다면, 아래의 다자대화에 대한 내용은 후자와 관련되어 있다. 즉,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 논의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간 회담과 협의에 관한 논의를 구분 짓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내에서 6자회담과 같은 다자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논의를 지지하는 입장은, 비록 6자회담이 실패로 끝나고 재개되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몇 년 동안 북한의 핵동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이들은 6자회담의 실패가 다자적 접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며, 만약 당시 협상이 북미 간 양자회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면 협상은 훨씬 더 빨리 결렬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6자회담의 불확실한 의제와 협상 내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가 협상의 실패 원인이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당시 미국은 단지 논의의 중심에 북한 비핵화만을 두었지만, 북한은 보다 넓은 의미의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협상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up>38)</sup> 이들은 다자대화를 통한 평화체제 논의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다 안정적인 평화체제의 확립에

---

36)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with Traveling Press,” October 5, 2018, <<http://www.state.gov/remarks-with-traveling-press-2>> (Accessed October 14, 2019).

37) 신육희,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p. 54.

38) Georgy Toloraya, “Designing a New Peace and Security System in Korea,” *38 North*, September 7, 2019, <<https://www.38north.org/2018/09/gtoloraya090718/>> (Accessed September 27, 2019).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이 한반도와 북핵 문제를 미중 무역 전쟁이나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다른 사안들과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윤곽에 대해 한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와 같은 한반도 주변국들과 양자 및 다자 대화를 시작하여, 각국의 이해를 파악하고 공식적인 협상 이전에 이에 대한 서로 간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다자주의적 접근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전 노력이 있을 때에만 추후 협상의 도출된 결과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합의 내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sup>39)</sup>

미국에게 있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고 협조적인 동맹국인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여, 미국이 향후 한반도 평화협정의 논의에 일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은 과거부터 동북아에서 일본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즉, 미국에 있어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일본과 미일동맹이라고 볼 수 있다.<sup>40)</sup> 일본은 줄곧 한반도 상황이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sup>41)</sup> 러시아 역시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로서, 중국과 함께 전략적으로 연대하여 한반도 문제에 참여하고자 할 수 있다.

---

39) USIP China-North Korea Senior Study Group, "China's Role in North Korea Nuclear and Peace Negotiation," May 6, 2019,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19/05/chinas-role-north-korea-nuclear-and-peace-negotiations>> (Accessed September 27, 2019).

40) 조찬래,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p. 164.

41) Emma Chanlett-Avery et al.,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p. 9.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와 어느 정도 긴밀하게 소통할지에 따라 평화협정 협상이 북미 양자 간 차원에서 이루어질지, 다자적 차원에서 이루어질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에 따르면, 과거 4자회담과 6자회담이 열리던 시기의 클린턴(Clinton)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는 한국이 공식적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대북 외교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면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한국과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42)</sup>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평화협정 관련 주요국은 한국, 북한, 미국, 중국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 러시아, 혹은 제 3국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간 협의에 참여하거나, 혹은 조약의 보증자(guarantor)로 참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 내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의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여, 북미 관계정상화와 미중관계가 평화협정 체결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

42) *Ibid.*, p. 9.

## 2. 한미 양자동맹에서 다자안보체제로의 전환

### 가. 한미동맹과 군사훈련

평화체제 구축으로 인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은 추후 한미 간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현재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의 억제력으로 유지되고 있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를 평화체제라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전환시키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sup>43)</sup> 김상기 외 시안은 제5조 ‘군비통제’에서 ‘한국과 조선은 외국군과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평화협정 체결 이후 한미 간 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을 상정했다.<sup>44)</sup> 미국 측 시안은 제4조 ‘한반도에서 연합훈련(Joint Exercises on the Peninsula)’이라는 조항을 넣기는 했지만 ‘한국과 북한이 모든 연합훈련의 규모와 장비를 제한’하고 ‘양측이 모든 훈련의 상호적 감시를 허용하고 사전에 통고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김상기 외 시안과는 달리, 연합군사훈련의 대상을 ‘외국군’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sup>45)</sup>

한반도에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입장은 주한미군의 미래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즉, 한반도에서 공식적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이루어지고 군사적 긴장이 해소될 경우 ‘평화’를 근거로 주한미군의 부분적, 혹은 완전한 철수 요구가 북한은 물론이고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반대했던 미국 내 세력, 한국 내 반미 세력을 중심으로 나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43) 정한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쟁점과 전망,” p. 157.

44)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 p. 43.

45) 미국 측 시안, p. 36.

그리고 이는 미군의 동아시아에서의 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종전선언에서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동북아 다른 국가 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해야 하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럴 경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내 미국 동맹과 전략적 태세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sup>46)</sup> 이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7)</sup> 만약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는다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내 다른 국가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즉, 이 역시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48)</sup>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장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감축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북한과의 협상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전쟁 게임(war games)”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쟁 게임’ 중단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혹은 축소 가능성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 간 협상 과정과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sup>49)</sup> 만약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해소될 경우 미국 국내에서 미군의 해외파병을 반대하는 주장은 힘

---

46) Emma Chanlett-Avery et al.,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pp. 8~9.  
 47) Peter Brookes, “This Is No Time for an Artificial Peace in Korea,” *The Heritage Foundation*, February 6, 2019, <<https://www.heritage.org/asia/commentary/no-time-artificial-peace-korea>> (Accessed September 28, 2019).  
 48) Scott Snyde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merican Views,” (통일연구원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2019.8.30.).  
 49) 황지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 pp. 82~83.

을 얻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해외주둔 미군의 철수 혹은 감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은 미국 내 이러한 집단을 대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의 외교 집단 간 의견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와 연기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추후 미국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한미군사훈련의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합동훈련이 한미연합군의 전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결정하지 않는 한 연합훈련은 지속될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2018년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임명된 에이브럼스(Abrams) 장군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가진 청문회에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에서 군의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받은 질문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연합군의 준비태세가 약화(I think that there was certainly degradation to the readiness of the force for the combined forces)”되었으며 “중단된 한미연합훈련은 (준비태세의) 지속성과 우리의 상호운용성 훈련을 지속하기 위한 핵심 훈련 (That’s a key exercise to maintain continuity and to continue to practice our interoperationality)”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본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안(top priority)이라고 밝혔다.<sup>50)</sup> 이와 같은 미 의회와 군 관계자의 우려는 앞으로도 한미군사 훈련 중단에 대한 미국 내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

50) Cludia Grisales and Corey Dickstein, “Gen. Abrams: Joint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a Top Priority,” *Stars and Stripes*, September 25, 2018, <<https://www.stripes.com/gen-abrams-joint-us-south-korea-military-exercises-a-top-priority-1.549099>> (Accessed September 27, 2019).



추가적으로, 북한이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해왔던 만큼 평화협정의 체결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해왔다. 특히 훈련 중 미국의 핵전력이 한반도에 접근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해왔다. 여기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전력이라 함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를 운반하고 발사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북한은 비록 미국이 오래 전에 한반도에서 핵항모와 핵잠수함을 철수시켰다 하더라도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플랫폼은 여전히 한미연합훈련 시 사용되고 있다고 비난한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로 모든 ‘핵 능력(nuclear-capable)’ 플랫폼의 철수를 주장한다면 미국과의 평화협정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sup>51)</sup>

반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의 네이탄 박(Nathan Park)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미군은 유럽 국가들에 여전히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한반도 내 미군의 주둔을 원하는 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이 ‘무임승차(free-riding)’ 하고 있다며 해외주둔 미군의 축소와 동맹국들의 부담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의 특성 상 대통령 단독으로 미군의 철수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60여년의 오랜 기간 동안 한국군과 유기적으로 운용되어 온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미국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52)</sup> 이 주장에 따르면, 결국 평화협정 체결 후

---

51) 미국 측 시안, pp. 33, 42.

주한미군의 철수 여부는 미국과 한국의 의지에 달려있다. 네이탄 박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단순히 한반도 평화 수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길 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미국 방문 중 *Fox News*와 가진 인터뷰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미군이 주둔하기를 원할 것으로 전망했다.<sup>53)</sup>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처음 주장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던 쟁점들이다. 북한은 종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sup>54)</sup>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과거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도 높게 요구해왔던 것에 비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이에 대한 요구의 수위가 낮아졌다고 평가한다. 즉, 주한미군의 주둔을 공식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즉각적인” 주한미군 철수(the immediate withdrawal of US troops)를 더 이상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고, 때로는 미군이 주둔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sup>55)</sup> 따라서 다른 대북 제재 조치들이 완화될 경우 주한미군에 관해서도 유연하

---

52) S. Nathan Park, “The U.S. Can Afford a Peace Deal in Korea: Opponents of an End-Of-War Declaration are Sorely Mistaken,” *Foreign Policy*, February 26, 2019, <<https://foreignpolicy.com/2019/02/26/the-u-s-can-afford-a-peace-deal-in-korea-south-korea-north-korea-hanoi-summit-trump/>> (Accessed September 27, 2019).

53) *Ibid.*

54) 신육희,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p. 37.

55) Robert Carlin, “Please Go, But Not Quite Yet: The Question of US Troops in South Korea,” *38 North*, April 2, 2018, <<https://www.38north.org/2018/04/rcarlin040218/>> (Accessed September 29, 2019).

게 대응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sup>56)</sup>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sup>57)</sup>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 변화를 고려해볼 때, 북한은 일본의 재무장화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동북아의 안정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sup>58)</sup>

결론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동맹전략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미국의 안보전략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정전협정의 준수에 대한 감시와 감독 권한은 유엔사령부가 갖게 되고, 미군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안정과 평화 수호의 역할을 맡아 전후에도 한국에 주둔하게 되었던 배경을 생각해볼 때 한반도 평화체제 하에서 미군의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은 어떤 식으로든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역내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야기하거나 미국의 이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sup>59)</sup>

---

56) Emma Chanlett-Avery et al.,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p. 8.

57) “Kim Isn’t Demanding U.S. Force to Leave,” *Korea JoongAng Daily*, April 20, 2018,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47197&loc=joongangdaily%7Chome%7Ctop>> (Accessed September 29, 2019).

58) Clint Work, “A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Not So Fast.”

59) 조찬래,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pp. 163~164.

## 나. 동북아 지역안보 기구

한반도 평화체제로 인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는 동북아 지역 안보 지형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역내 복잡한 동맹 관계와 경쟁 관계를 기반으로 유지되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은 지역질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sup>60)</sup> 과거 부시 행정부는 이점에 대해 인식하고 역내 다자 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예를 들어 2005년 11월 17일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차 한국을 방문한 부시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공동성명발표를 통해 “지역 안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다자안보대화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할 것(common efforts to develop a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 and a cooperation mechanism so as to jointly respond to regional security issues)”이라고 밝혔다.<sup>61)</sup> 동북아 지역안보 기구의 창설을 지지하는 입장은, 한반도 과거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주변국들과의 관계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을 들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정착을 위해서 주변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제로써 동북아 지역안보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초기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2)</sup>

동북아 지역안보 기구의 설치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

60) 정한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쟁점과 전망,” p. 157.

61) James E. Goodby, “Creating a Peace Regime in Korea,” *Brookings*, May 30, 2006, <<https://www.brookings.edu/opinions/creating-a-peace-regime-in-korea/>> (Accessed September 29, 2019).

62) *Ibid.*

의 위협 인식에 대해 고려해볼 때 ‘핵이 없는’ 북한을 보호해주는 역내 안보기구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즉,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정권과 체제의 보존이었고 현재 북한에게 핵이란 정권 생존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도구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핵을 먼저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리비아의 카다피(Gaddafi) 정권이 미국과의 협상 끝에 핵무기를 폐기했지만 결국 정권이 붕괴되고 만 사례를 북한이 간과할 리 없다고 설명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된 후 평화 정착과 유지를 위해서도 동북아 지역안보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과거부터 한반도 평화가 역내 라이벌 국가들 간 경쟁으로 좌지우지 되어왔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평화 유지를 위한 지역안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6자 지역안보협의회(six-party regional security council)와 같은 주요국 중심의 안보협의회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을 ‘핵무기 자유구역(nuclear-weapons-free-zone)’으로 설정하여 북핵 비핵화 협상 이행과 감시를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미국 내 미사일 방어체계와 동아시아 내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는 이들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sup>63)</sup>

동북아 안보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도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현 시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관련 주제에 대한 성공적인 협상과 안정적인 체제의 구축을 위해 안보체계에 대한 논의

---

63) 미국 측 시안, p. 46.

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당사국들은 모두 각기 다른 우선순위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오랜 역사 속에서 한반도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던 주변국들에게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협의 내용에 불만이 생길 경우 협의의 이행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협의 과정에 주변국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관련국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64)</sup>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동맹 비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의 기조를 생각해보면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안보 체계와 관련된 논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한다.<sup>65)</sup>

한편, 미국의 대중 위협 인식을 고려할 때 미국은 동북아 지역안보 기구의 창설을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아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일부로 생각하고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바마(Obama)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이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공간 창출과 선별적 억제에 기반하고 있었던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 경쟁,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현상타파 세력들을 대상으로 한 균형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sup>66)</sup> 이를 위해 균형 정책을 위한 강압적 안보 수단의

---

64) Georgy Toloraya, “Designing a New Peace and Security System in Korea.”

65) John Hemmings, Ramon Pacheco Pardo, and Tat Yan Kong, *Negotiating the Peace: Diplomacy on the Korean Peninsula* (London: The Henry Jackson Society, 2018), p. 17.

66)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ecurity Strategy: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https://>

비중을 증가시켰다. 특히, 중국을 지역 질서와 번영, 미국의 국익과 미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전략적 이익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설정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고 있다.<sup>67)</sup>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안보와 안정성 문제는 미중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이 가장 큰 위협으로 상정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미국의 대중관계 설정과 동아시아 안보의 큰 틀에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국의 군사적 능력과 역내 영향력이 커질수록 미국의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개입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한반도 문제도 미국의 대중전략의 한 측면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해왔을 뿐 북한과 북미관계 그 자체에 지정학적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만약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증가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내 안보 지형과 미국의 역내 지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북한이 미중 간 지정학적 긴장과 미중 경쟁 원인이 될 수 있다.<sup>68)</sup>

---

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 (Accessed October 24, 2019).

67) *Ibid.*

68) Scott Snyde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merican Views."

### 3.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의 관계 설정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평화와 비핵화의 선후 관계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완벽한 비핵화가 체제보장과 평화협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미국은 평화협정을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하고 있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그 논의가 시작될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69)</sup>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평화협정을 언급하는 이유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변화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라고 분석한다.<sup>70)</sup> 동시에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협상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핵국가로서의 북한의 지위를 공고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시 말해, 종전선언 이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북한의 평화협정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종전선언 이후 북한의 후속 비핵화 조치에 대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협상의 기제가 별로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sup>71)</sup> 따라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국이 공식적으로 평화협정에 서명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평화협정문 시안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조항은 김상기 외 시안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조항과 미국 측 시안의 ‘안보협력 (Security Partnership)’ 조항이다. 이는 북한은 2020년 이내에 모

69) 황지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 p. 73.

70) Emma Chanlett-Avery et al.,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p. 9.

71) 정성운 외,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307.



든 핵무기와 핵물질,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시설들을 완전히 폐기하며, 미국과 중국 역시 한반도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을 하지 않고 핵무기 및 투발 수단을 한반도 지역으로 전개, 배치, 경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미국과 중국도 이 조약에 서명국으로 참여할 것을 설정했다.<sup>72)</sup> 미국 측 시안은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기반한 안보협력을 구축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sup>73)</sup> 이 시안에서, 안보협력 구축 제안은 미국과 중국의 강한 반대를 불러올 수 있지만, 만약 안보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 시점에서 미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은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이 병행적(in parallel)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순차적(sequentially)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부터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로 이어지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순차적 접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sup>74)</sup> 즉,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대화는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여줬을 때만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시 행정부 시기 동북아시아 강대국들과의 공동행동을 통한 압박과 더불어, 단순히 북한에 물질적인 보상을 주는 방식이 아닌 핵 프로그램 폐기와 경제협력, 관계정상화, 종전선언 등 다양한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을 취한 적은 있었다.<sup>75)</sup> 그러나 여전히 미국 정부의 방식은 순차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72)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 pp. 42~43.

73) 미국 측 시안, pp. 37~38.

74) Emma Chanlett-Avery et al.,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p. 9.

75) 조찬래,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p. 161.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역시 선 비핵화 입장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있다. 일례로, 헤더 노어트(Heather Nauert)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2018년 8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간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종전선언 논의보다 북한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다른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믿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정책(I can tell you that we believe that denuclearization has to take place before we get to other parts and that’s been our policy)”이라고 밝혔다.<sup>76)</sup> 이와 비슷한 취지로, 2018년 8월 8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VOA)를 통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마쳤을 때 정전협정을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sup>77)</sup>

이러한 순차적 접근에 반하여,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는 다른 한쪽의 진전 상황에 맞춰 병행이 가능하며, 이럴 때 북한의 비핵화가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병행적 접근을 지지하는 이들은 실질적으로 핵무기와 핵물질, 미사일, 핵기술, 핵인력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비핵화를 이행하는 것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완벽한 비핵화 이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탄두의 폐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까지 협정에 대한 서명이나 조약에 대한 비준을 연기하는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76) “노어트 대변인, ‘종전선언보단 비핵화 먼저...한국과 불협화음 사실 아냐,’” VOA 2019.8.30., <<https://www.voakorea.com/a/4549817.html>> (검색일: 2019.10.21.).

77) 위의 글.

미국과 북한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 비핵화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에 관한 부분이다. 미국은 과거 2차 북핵 위기 당시 6자회담을 통해 선 핵포기 후 지원 및 보상 원칙을 확립한 이래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는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포함한 어떠한 협상도 불가능하다는 ‘전략적 인내 전략’을 추구했다.<sup>78)</sup>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의 기초를 갖고, 압박정책을 통해 북한의 행동 변화를 견인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집권 초기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를 타협 불가능한 목표로 설정하고 일괄타결 방식과 선 핵포기 후 보상 입장을 취했다. 이후 2018년 9월 경, CVID를 대체하는 개념인 ‘최종적이고 전적으로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를 선택하여 불가역성을 생략한 대신, 검증 부분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가장 큰 상응조치는 경제제재의 해제일 것이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와 경제제재 해제 문제에 대한 상호 양보를 기반으로 하는 ‘단계적 접근(phased approach)’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일괄타결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영변의 핵실험장을 영구히 폐쇄할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반면, 미국은 ‘영변+α’를 요구하면서 영변 외의

---

78) 정성윤·이수형·이무철,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65.

핵시설 폐기와 핵물질과 핵탄두, 미사일은 물론이고 생화학무기와 시설에 대한 신고와 폐기, 검증까지 요구했다. 미국은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경제제재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sup>79)</sup> 협상 결렬 이후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써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북한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자신들이 미국에게 유엔 안보리 제재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의 해제만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입장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의 경제 제재의 전면적 해제 요구였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sup>80)</sup> 협상 과정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점진적인 접근(incremental approach)’을 거부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전적으로 검증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완전하게 제재를 해제하는 ‘빅딜(big deal)’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sup>81)</sup>

트럼프 행정부의 ‘빅딜’ 추구를 비판하는 미국 내 입장은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의 상호 불신이 높다는 점을 생각할 때 북한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미국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상응 조치에 필요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점진적 프로세스(step-by-step process)를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제재 해제 및 상응조치와 관련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도 모두 중단된

79) 통일연구원 현안분석팀,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http://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2&searchField=title&searchText=&biblioId=1512255>> (검색일: 2019.9.29.).

80) 위의 글.

81) USIP China-North Korea Senior Study Group, “China’s Role in North Korea Nuclear and Peace Negotiation.”

상황이다. 앞으로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과 어떠한 경제적 협력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어느 정도 실행 할 경우 남한의 협력 관계 증진에 관해서는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경제 제재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확고하지만, 미 의회 역시 남한이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서 경제적 지원을 부담한다면 행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

#### 4. 평화협정의 보증문제: 유엔사의 기능 조정 및 협정 감시 집행기구 설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정전상태를 관리·감독하는 기구인 유엔사의 성격과 역할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 측 시안의 ‘한반도 평화관리와 신뢰구축 조치’ 조항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유엔사를 해체하고, 평화협정 감시와 이견 조정 기구로써 한국, 북한, 미국으로 구성된 3자 한국평화위원회(a three-party Korean Peace Commission: KPC)와 중국, 러시아, 일본, 스웨덴을 포함하는 7자 국제평화감독위원회(the International Peace Observe Commission)를 유엔의 지원 하에 설치한다. 한국평화위원회의 당사국은 대사급 대표를 파견하고, 2년의 임기를 갖는 위원회 회장은 유엔사무총장이 결정한다. 한국평화위원회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과 그동안 북한 측으로부터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한다.<sup>82)</sup> 이러한 미국

---

82) 미국 측 시안, pp. 36~37.

측 시안은 90일 이내에 유엔사 해체와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로서 평화협정 당사국 대표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와, 당사국 간 이견 조정 기구로서 국제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김상기 외 시안보다 더 급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sup>83)</sup>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엔사 해체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의사에 달려있다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sup>84)</sup> 실제로, 1994년 당시 유엔사무총장인 보우트로스-갈리(Boutros-Ghali)는 북한 외 무성에 보낸 편지에서 유엔을 유엔사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유엔사의 설치와 해체는 미국의 권한 내에 있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통합사령부(유엔사)를 안보리의 보조기관으로 설립하지 않았고, 다만 미국의 권한 내에 있는 사령부의 창설을 추천했을 뿐이다. 따라서 유엔사 해체는 어떠한 유엔기관의 책임이 아닌 미국 정부의 권한 내에 있는 문제이다(The dissolution of the unified command does not fall within the responsibility of any United Nations organ but is a matter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sup>85)</sup>

과거부터 미국은 유엔사 보존의 필요성을 일관된 논조로 강조하고 있다. 유엔사 관련 문서들에 따르면, 유엔사의 대표적인 임무는

---

83)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 p. 44.

84) 이기범, “유엔군사령부의 미래 역할 변화와 한국의 준비,”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19.7.8., <<http://www.asaninst.org/contents/유엔군사령부의-미래-역할-변화와-한국의-준비/>> (검색일: 2019.10.15.).

85) Ronda Houben, “US Misrepresents Its Role in the Korean War. US Occupation Troops in South Korea under UN Command,” *Global Research*, June 29, 2013, <<https://www.globalresearch.ca/us-misrepresents-its-role-in-the-korean-war-us-occupation-troops-in-south-korea-under-un-command/5341002/>> (Accessed October 15, 2019).

북한의 무력공격 격퇴와 한국방위 책임, 한반도 통일 지원, 정전협정 이행 및 준수, 유사시 전력제공자로서 기능 등이다.<sup>86)</sup> 미국의 입장에서, 유엔사가 보존될 경우,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별도의 유엔결의안이 불필요하고, 한반도 군사 작전 시 일본 내 7개 유엔사 기지를 사용할 명시적 권한이 보장된다. 또한, 한국군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미국이 유엔사 해체에 대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 국방 고위당국자들의 유엔사 유지에 관한 일관된 발언도 유엔사 존치에 대한 미국의 변하지 않는 입장을 잘 반영한다. 버웰 벨(Burwell Bell)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2006년 3월 9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중심인 유엔사령부를 유사시 다국적 연합군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sup>87)</sup> 2007년 1월 9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유엔군 사령관은 미래 주한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지원 역할과 유사한 지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유엔군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sup>88)</sup> 2007년 미 상원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며, “유엔사령부의 집행 대리인으로서,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지휘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과 유엔전력제공국들과 공조를 지속할 것”이며 “침공을 억제하는 핵심 사령부로 남고, 한반도에서 전쟁 발생 시 전투 전력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ensuring that the United Nations Command remains a critical command in deterring aggression, and supporting combat operations should war break out on the

86) 송승중, “중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7권 (2019), pp. 251~252.

87) 『조선일보』, 2006.3.11. 재인용: 조찬래,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p. 166.

88) 이인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과 대책,” p. 16.

peninsula)”라고 밝혔다.<sup>89)</sup>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부임하고 있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 역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유엔사, 주한미군, 연합사 중 어느 한 사령부도 나머지 두 사령부가 없으면 한반도 안보를 증진시키는 공동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Not one of the three commands can be successful in the overall mission of advancing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the other two)”라고 밝히며 미군의 세 축의 하나로 유엔사의 기능을 강조했다.<sup>90)</sup>

미국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엔사 역할 강화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루어지고 평화체제 구축이 시도되더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 다국적군을 통해 한반도 내 작전권을 확보하고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sup>91)</sup>

특히, 미국이 이미 유엔사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은 미국의 유엔사 존치와 기능 강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sup>92)</sup> 2018년 7월 30일 비미국 출신으로는

89) “Statement of General B. Bell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Commander,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Commander, United States Forces Korea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April 24, 2007, p. 27, <[https://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congress/2007\\_hr/070424-bell.pdf](https://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congress/2007_hr/070424-bell.pdf)> (Accessed October 3, 2019).

90) “Advance Policy Questions for General Robert B. Abrams, USA Nominee to be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Commander,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Commander, United States Forces Korea,” p. 2, <[https://www.armed-services.senate.gov/imo/media/doc/Abrams\\_09-25-18\\_APQs.pdf](https://www.armed-services.senate.gov/imo/media/doc/Abrams_09-25-18_APQs.pdf)> (Accessed October 3, 2019).

91) 이인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과 대책,” p. 16.

92) 2016년 주한미군사령관, 유엔사령관으로 임명된 커티스 스카파로티 육군 소장이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가진 청문회에서 “유엔사 재활성화를 통해 한국의 방어능력에 대한 국제적 기여를 증진시키고 있다(a revitalizing UNC strengthens the international contribution to Korea’s defense)”고 밝혔다. “Statement of General Curtis M. Scaparrotti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Commander, United States



최초로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임명된 웨인 에어 캐나다 육군 준장(Lt. Gen. Wayne D. Eyre)은 취임사에서 “유엔사 재활성화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국제적 헌신의 혁신에 있어 중요한 행보(This (UNC) revitalization is an important move toward transforming international commitment to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라고 밝히며 재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웨인 에어 준장의 임명이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위한 혁신화 노력(transformational efforts)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빈센트 브룩스(Vincent Brooks) 당시 유엔사령관은 “유엔사 재활성화는 유엔사를 주한미군과 별도로 운영되도록 구조화하고 참여국들의 구성이 보다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organizing it to operate largely free of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S Forces Korea, and reflecting more of the composition of the sending states)”고 설명했다.<sup>93)</sup> 즉, 김기범이 주장한 것처럼, 미국이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비 미국 출신으로 임명한 것은 미국이 유엔사를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분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다국적군’화를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sup>94)</sup> 따라서 오히려 현재까지 유명무실했던 유엔사의 기능이 평화협정의 체결로 인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Republic of Korea Combined Forces Command; and Commander, United States Forces Korea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February 24, 2016, p. 7, <<https://docs.house.gov/meetings/AS/AS00/20160224/104587/HHRG-114-AS00-Wstate-ScaparrottiC-20160224.pdf>> (Accessed October 15, 2019).

93) United States Forces Korea, “United Nations Command Hosts Change of Responsibility Ceremony,” July 30, 2018, <<https://www.usfk.mil/Media/News/Article/1594983/united-nations-command-hosts-change-of-responsibility-ceremony/>> (Accessed October 15, 2019).

94) 김기범, “유엔군사령부의 미래 역할 변화와 한국의 준비,” p. 9.

그러나 현 시점에서 미국은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9년 10월 17일 제5회 미래 지상군 발전 국제심포지엄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 재활성화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유엔사령부를 어떤 작전 사령부로 바꾸려는 비밀계획 따위는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며, “재활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보다는 (유엔사를) 제대로 된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사시 증원이 있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sup>95)</sup> 이 발언은 비록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 강화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의혹과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그동안 유엔사의 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유엔사 해체에 대해 미국이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은 유엔사를 재활성화시켜,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역할과 일본을 비롯한 역내 동맹국들과의 협업을 재고하기 위해 한국을 합동군의 작전사령부의 거점으로 만들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sup>96)</sup> 유엔사 문제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계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97)</sup>

95) “유엔군사령관 “유엔사→작전사령부, 비밀계획 없다.”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31371&code=611111111&cp=nv>> (검색일: 2019.10.22.).

96) 송승중, “중전선언, 평화협정과 유엔사령부,” pp. 253~254.

97) “한미연합사령관 “유엔사령부를 작전사령부로? 가짜뉴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171557081196?did=NA&dtype=&dtype=ecode=&prnewsid=>> (검색일: 2019.10.22.).

## 5. 소결

미국은 2005년에 개최된 6자회담 제 4차 회의를 통해 도출된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에 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미국 부시 대통령이 2005년 11월 17일 하노이 APEC 정상회담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때,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국전의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이행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다.<sup>98)</sup> 이처럼, 북핵 문제를 위한 다자 회의를 통해 평화협정과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표출된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도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이후 발생한 북핵 위기로 북미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되었던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는 2018년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개선으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북미공동성명문과 9·19 판문점 선언은 모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모든 관련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하지만 두 선언 모두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과 방식과 더불어 평화체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 내 전문가들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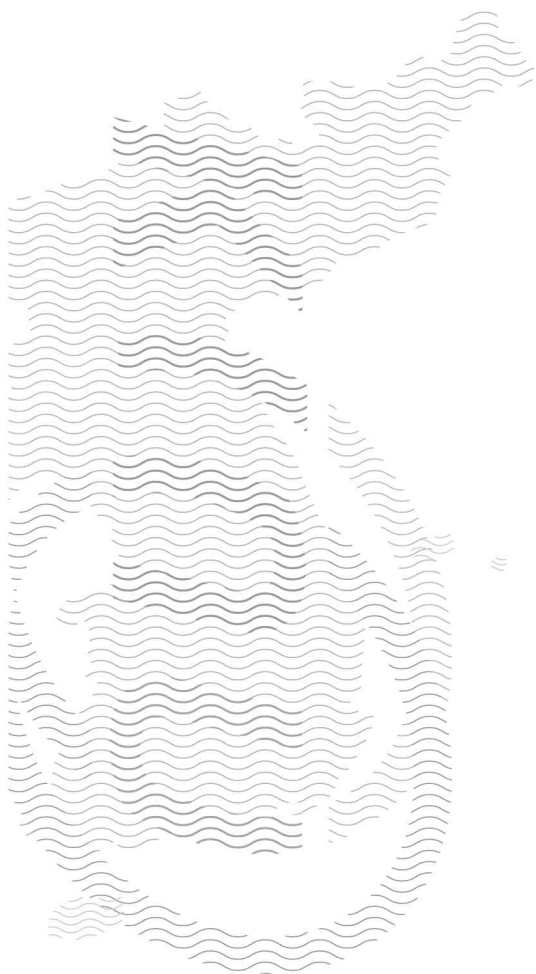
98) 이태환, “미국, 중국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황지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 참조.

의견들 역시 분분하다. 예를 들어,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피터 브룩스(Peter Brooks)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평화협정 체결은 이론적인 차원에서 한국전의 종식이며 “워싱턴과 평양 간 정치적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little more than a symbolic gesture of potential better political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일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와 경제제재 해지 요구 등과 같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향후 미국이 북한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정치, 경제, 군사적 압박을 위한 기제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경고한다. 따라서 북한과의 선부른 평화협정 체결은 미국의 국익과 동아시아 정책 추진에 방해가 될 것으로 주장한다.<sup>99)</sup> 이에 반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하는 입장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과정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미국의 오랜 목표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을 펼친다. 이들은 미국의 동아시아 역내 군사, 정치적 영향력은 추후 동맹 정책의 조정과 유엔사 및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등을 통해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결론적으로 본장에서 살펴 본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대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이러한 논의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99) Peter Brookes, “This Is No Time for an Artificial Peace in Korea.”; Nicholas Eberstadt, “Trump Meets Kim Jong-un This Week. There’ll Be One Winner,”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5, 2019, <<https://www.nytimes.com/2019/02/25/opinion/trump-kim-hanoi-summit.html>> (Accessed September 28, 2019).

### Ⅲ.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 내 논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 내 논의는 주로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 중국의 역할과 지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과 관련된 군비통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일시 중단(쌍잡정), 비핵화-평화협정의 병행(쌍궤병행, 雙軌並行), 단계적(分階段)·동시적(同步走) 방식의 대화와 협상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쌍잡정과 쌍궤병행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써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단계적·동시적 방식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치적인 해결과 서로의 합리적인 우려를 타당하게 해결하는 것을 지지했다.

그리고 최근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중국은 “관련 측이 얻기 힘든 정세 완화의 국면을 소중히 여기고, 대화와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정상들이 달성한 정치적 합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과 원칙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로 들어가면 중국 정부의 입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 동아시아에서의 양자 동맹과 다자안보체제의 관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관계 설정, 평화협정의 이행 담보라는 네 가지 주제 속에서 구체적인 쟁점별로 중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과 입장을 분석할 것이다. 중국 측의 입장을 분석할 때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평화협정 시안과 통일연구원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평화협정 당사국들의 입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구성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중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1.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와 역할 규정

1984년 북한이 건의한 북미 간 평화협정체결과 남북한 간 상호불가침조약 체결 방안에 대해 중국과 소련은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동기를 의심하면서 중국을 포함시켜 4자회담을 주장했다. 1990년대 한미양국이 4자회담을 제안한 이후 중국은 평화협정에서 자신을 주된 당사자로 인정했다. 이는 북한과 미국 주도의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상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은 한국이 주요 당사자라는 한미 양국의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다.<sup>100)</sup> 기본적으로 중국은 4자 중심의 평화체제 전환방식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이 자신을 당사자로 주장하는 것은 과거 6자회담 의장국이자 중재자로서 역할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차 북핵 위기 시 중국의 중재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개최되었고,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6자의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실무그룹 구성 및 활동을 지지했다. 실무그룹은 한반도 비핵화,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로 구성되어 중국은 각 영역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이 자신을 당사자로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정전협정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에 찬성하고,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방식을 선호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당사자로 들어가는 이상 어떠한 형식이든 아직 특별한 선호를 내비치지 않는 상태이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 간

100) 정성윤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56.



판문점선언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 체결 가능성을 제시했을 때 중국은 우려와 불쾌감을 표명하기도 했다.<sup>101)</sup> 또한 중국은 평화협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지만 관련국 간 논의를 거쳐 협상을 타결하려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sup>102)</sup>

과거 한반도 정전협정체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소극적인 평화 상태를 유지시켰고, 남북한 사이에 충돌과 갈등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한국전쟁과 같은 군사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소극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정전협정 자체는 전쟁을 종결하지 못했고, 평화협정은 이러한 정전협정을 대체하여 소극적인 평화를 적극적인 평화로 전환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정전협정이 초래한 핵문제 및 남북문제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평화협정을 통해 극복하고 정전협정 체제의 교훈을 얻어 평화의 기초를 조성하는 것이다.<sup>103)</sup>

따라서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미국, 중국, 남북한 4자가 되고, 중국 측 평화협정 시안 제1조에는 우선 전시상태의 종결을 선언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종료하는 것은 한국과 북한이 상호 정치체제, 군사 안보, 사회경제 발전을 존중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적대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남북이 더 이상 상대 체제의 전복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을 말한다.<sup>104)</sup>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한미, 북한에

---

101) 정성운 외,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106.

102) 孙茹, 『朝核问题: 地区合作进程研究』 (北京: 时事出版社, 2009), pp. 238~239. 재인용: 성기영 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실현과 국제협력』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p. 124

103) 중국 측 시안, p. 8.

104) 위의 글, p. 1.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종전선언의 관련국 입장을 대립으로 비핵화 협상이 지연되자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남북미 3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듯 보였다. 즉 종전선언 문제로 비핵화 협상이 지연되는 것보다 비핵화 협상 진전을 통해 중국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sup>105)</sup>

하지만 한 중국학자는 한국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종전선언에서 중국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경계했다.<sup>106)</sup> 또한 중국의 한 반관영 언론매체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되는 가운데 ‘차이나패싱(중국소외론)’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를 비판하는 논조를 보였다. 즉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남북과 미국만이 종전선언을 체결하면 그만이라는 의견에 대해, 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국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의 확고한 지지자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중국의 이익이라고 역설했다.<sup>107)</sup> 외교부 전 차관이자 현 칭화대학 전략안전연구소 센터장인 푸잉(傅瑩)에 의하면 중국의 역할론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작용을 ‘닻(锚定)’으로 표현했다. 즉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보장 작용을 하는 동시에 평화회담에서 탈선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닻의 작용을 하면서 충돌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sup>108)</sup>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역할 변화는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압박을 기대했지만 이

105) 정성운 외,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p. 308.

106) 李敦球, “朝美关系和半岛局势近期三个值得关注的特征,” 『中国青年报』, 2018.5.30.,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8QQ4>> (검색일: 2019.10.24.).

107) “环球时报,” 2018.5.29.,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80AJ>> (검색일: 2019.10.24.).

108) 傅瑩, “朝核问题和和平解决的机遇之窗,” 『观察家网』, 2018.6.11., <[http://www.guancha.cn/fuying/2018\\_06\\_11\\_459675\\_s.shtml](http://www.guancha.cn/fuying/2018_06_11_459675_s.shtml)> (검색일: 2019.10.24.).

에 미치지 못하자 중국 책임론이 등장했고, 중국은 이에 맞대응하여 2017년 3월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한반도 핵문제의 당사자를 북한과 미국으로 지목하였다. 추이텐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도 미국 책임론을 강조하였다. 2018년부터 상황이 급변하여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중국소외론이 등장했지만, 이후 북중정상회담의 개최와 양제츠(楊潔篪)의 방한으로 중국역할이 다시 주목을 받았고,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특정 역할을 선불리 수행하려고 하기 보다는 비핵 협상과 미중관계 등의 요인에 따라 유동적인 행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sup>109)</sup>

한편 남북한은 적대행위의 전면적 중지와 상호 존중을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 중국, 한국, 북한 4자가 지역의 평화·번영·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필수적인 도움과 협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10)</sup> 이는 남북한의 당사자 역할과 4자의 보장자 역할을 어느 정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고 중국 측에서 제시한 평화협정 체결 방식이 2+4는 아니고 4자의 포괄협정과 부속협정 체결 방식이다.

즉 4자가 「한반도 평화협정」의 포괄협정과 「한반도군사분야 의정서」, 「한반도 종전, 상호불가침, 안정실현(落實穩定)에 관한 의정서」, 「한반도평화관리위원회 설립 의정서」, 「국제감독위원회 설립 의정서」, 「한반도평화협정 적용 경계선 및 분계 도시(圖示)」 총 5개의 부속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은 별도로 「중화인민공화국의 한반도자주평화통일지지성명」을 발표한다.

「한반도군사영역의정서」와 「한반도 종전, 상호불가침, 안정실현(落實穩定)에 관한 의정서」는 남북미중 4자가 적대시 정책 종언,

109) 이동률,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1호 (2019), pp. 168~171.

110) 중국 측 시안, p. 1.

관계 개선, 평화 공존을 통해 최종적인 한반도의 자주평화통일 실현 내용을 포함하고, 각 측이 평화적 수단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무력이나 무력 위협을 추구하지 않으며, 평등과 상호 이익의 원칙에서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교육 등 영역의 교류 협력을 발전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핵심은 북한의 핵 계획 포기, 한반도 비핵지대 건설, 북한의 생존 안전 보장, 한미군사동맹 재정립 등이다.<sup>111)</sup>

특히 쟁점이 되는 사항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군사분야 의정서 모두에 중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즉 한 전문가는 평화협정(4자)과 군사협정(3자)을 분리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중국 참여는 평화협정의 최종단계에서만 허용하는 것이다.<sup>112)</sup> 하지만 평화협정과 군사협정의 분리 추진은 중국 혹은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군사영역에서 중국의 보장이 없으면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북중 간 군사개입 조항과 북중동맹을 분명하게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반도평화관리위원회 설립에 관한 의정서」와 「국제감독위원회 설립에 관한 의정서」는 한반도 평화 실현 관리기구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고, 「한반도평화협정 적용 경계선 및 분계 도시(圖示)」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형성된 사실상의 경계로 남북한의 경계를 구분하고 남북의 서해 경계에서의 분쟁은 잠시 미뤄두고, 후대에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sup>113)</sup> 따라서 중국 측 시안은 북중 해양경계선 확정, 서해 경계선 확정, 이어도 문제, 북방한계선, 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의 중첩, 영공의 범위와

111) 중국 측 시안, pp. 27~28.

112) 조성렬, “지정학의 도전과 원칙 있는 외교,” (통일연구원 조찬 간담회 자료, 2019.8.1.).

113) 중국 측 시안, p. 28.

영공 침범 등에 대한 복잡한 논의에서 그 어떤 설명도 제시하지 않고 사실상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후대에 더 큰 분쟁의 씨앗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에서 또 다른 쟁점은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미중의 지위와 역할이다. 중국 측 시안이 제시하는 것은 두 강대국이 경쟁에서 책임지는 역할로 전환하고, 한반도 무정부 상태에 대한 ‘공동 관리와 단속’이라는 보장자 지위를 맡는다는 것이다. 즉 과거 한반도는 협정을 파기하거나 기존 합의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제지할 수 없는 무정부상태였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과정에서 미중이 경쟁관계를 피하고, 이러한 무정부상태를 함께 관리하고 단속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내용이 중국 측 평화협정에 반영되었다.<sup>114)</sup> 하지만 이러한 미중 간 협력적 역할에 대한 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실현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미중은 북한의 핵 폐기 문제에서 공식적인 정치 성명과 보장을 발표하고, 한반도에서 재래식 군사력 감축 조치 시행을 명확히 약속하며, 한반도 핵문제에서도 질적·양적 감축을 약속하고, 북한의 정치안전, 국가안전, 발전안전을 보장한다. 기술적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보장한다.<sup>115)</sup> 하지만 미중의 한반도 비핵화 보장 역할은 비핵화 비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주로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도 확실한 절차를 통해 비핵화로 나아간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미국, 한국, 일본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동일하게 한국

---

114) 위의 글, p. 5.

115) 위의 글, p. 9.

역시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어떤 당사자도 임의로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은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과 한반도에서 핵능력 퇴출 문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외교적 행동을 취하며, 주변 국가의 이해와 한반도 평화 진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다.<sup>116)</sup>

6자회담국인 러시아와 일본은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두 국가가 한국전쟁 정전 과정에 실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정전협정의 서명국은 아니지만 한국전쟁의 당사자라는 사실은 자명하고, 한반도 평화와 평화협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참여자라는 사실도 분명하다.<sup>117)</sup>

러시아의 입장은 외교, 경제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형편이나 6자회담과 같은 다자체제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이고 군사적인 조치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 정권의 후견국이자 한반도 문제의 핵심적 이해당사국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판문점선언에서 러시아가 배제된 것을 우려하고 있다.<sup>118)</sup>

또한 이 평화협정의 목적은 4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안정을 목표로 하고,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항구적인 평화·안정과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도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sup>119)</sup>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화협정의 당사자를 4자로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당사자들 사이의 인식차이다. 즉 한국과는 다르게 북한은 한때 평화체제가 남북 간 문제가 아니라 북미 간 고위층 회

---

116) 위의 글, p. 9.

117) 위의 글, p. 6.

118) 우준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 쟁점과 과제: 러시아,” (통일연구원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2019.8.30.), pp. 98~99.

119) 중국 측 시안, p. 7.

담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물론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3자와 4자 중 어떤 방안을 선호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한편 중국은 정전협정 체결 후 한반도의 문제는 남북한의 자주평화통일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남북한 당사자 원칙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정전협정 당사자 원칙을 한때 주장하기도 했다.<sup>120)</sup>

미국의 경우도 트럼프의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과 폼페이오의 2018년 10월 8일 언론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당사자로서 중국이 포함되는 것에 동의하였다.<sup>121)</sup> 따라서 북한을 제외한 한국, 중국, 미국이 평화협정 당사자로서 남북미중 4자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고, 북한의 경우 판문점선언을 통해 3자 혹은 4자에 동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독자적으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과 나머지 당사자들 사이에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는 쉽게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120) 진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중국의 입장,” (통일연구원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2019.8.30.), pp. 43~44.

121)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 p. 34.

## 2. 한미/북중 양자동맹에서 다자안보체제로의 변환 혹은 병행

### 가. 군비통제: 주한미군·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정과 북중동맹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건설을 위해서는 군비통제가 필수적이다. 중국 측 시안은 남북 사이에 재래식 군사력의 축소와 동시에 주한미군의 활동목적과 범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전제가 되는 것은 군비통제 활동 진전이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가야한다는 것을 중국 측은 강조했다.<sup>122)</sup> 하지만 중국 측 시안은 비핵화의 수준과 군비통제 개시 시점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군비통제와 평화협정을 연계하여 미국에게 요구한다면 미국 쪽의 거부나 유보적 태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미국은 군비통제 문제에 열린 태도로 접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의 적극적 지원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고, 미국의 지원 없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군비통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sup>123)</sup>

반면 북한이 원하는 군축은 무기감축보다는 병력감축을 선호하고, 최종병력 남북한 각각 10만 명, 외국군 병력 및 장비 철수, 외국군과 합동군사연습 중지 등을 제시했다. 따라서 군비통제에서 쟁점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문제를 군비통제의 수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이다.<sup>124)</sup>

122) 중국 측 시안, p. 18.

123) 우정엽,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 쟁점과 과제: 미국의 인식에 대해,” (통일연구원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2019.8.30.), p. 84.



한편 중국은 1990년대 말 4자회담 시 북한이 제기한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과 주한미군 전력 감축을 맞바꾸자고 미국 측에 제안한 적이 있다. 2017년 들어서 중국은 구체적인 비핵화 대화 재개 방식으로 쌍중단을 주장했고, 즉 북핵 도발 중단 및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주장했다.

중국은 주한미군이 한미 간 문제일 뿐 아니라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며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을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sup>125)</sup> 하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을 냉전의 산물이자 미국의 중국 견제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가 진전됨에 따라 한미군사훈련의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철수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종전협정과 평화협정 국면이 전개되면 한미동맹의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철수 요구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 측 평화협정시안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지위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평화협정 중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관한 법률 지위에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미 간 체결한 군사동맹은 더 이상 북한이나 제 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격형 무장병력과 전략자산은 본 협정 범위 내에 있는 당사자의 필요를 넘어서거나 제3자를 겨냥하는 무기와 장비 혹은 정보 정탐과 전략자산 및 활동으로써, 이러한 무기들을 수입하거나 배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sup>126)</sup>

124) 김용현, “한반도 평화체제 체결 시 북한의 쟁점과 과제,” (통일연구원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2019.8.30.), p. 76.

125) 성기영 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실현과 국제협력』, p. 124

또한 한미군사훈련은 더욱 규모 축소를 진행하고 군사 훈련 내용을 바꾼다.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화해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연합 군사훈련을 취소한다. 북한은 오랫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군사훈련을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따라서 유엔 연합사의 해체 이후에 한미동맹 관계는 여전히 지속되더라도 평화협정에 따라 한미 사이의 군사훈련은 제 3국을 겨냥하지 않는 원칙으로 바뀌어야 한다.<sup>127)</sup>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북관계의 진일보 개선과 화해와 함께 한미 군사훈련은 규모를 더욱 축소하고, 군사 훈련 내용은 반테러리즘과 인도주의 구호 등 비전통 안보의 훈련으로 하며, 남북관계의 완전한 화해가 실현되고 한미 양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미군사훈련은 최종 취소한다.<sup>128)</sup>

한국 측 시안에서도 5조 군비통제에 북한의 비핵화 완료 이후 주한미군의 구조적 군비통제 동참과 같은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안 조항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는 2020년 이내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협의와 같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sup>129)</sup> 이는 중국 측이 한국 측보다 주한미군과 한미군사훈련의 운용적 군비통제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축소, 한미군사훈련 축소와 같은 민감한 이슈가 평화협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복잡한 계산을 가지고 있다. 즉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고려하고, 미국의 많은 동맹 전문

---

126) 중국 측 시안, p. 20.

127) 위의 글, p. 20.

128) 위의 글, p. 21.

129)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 pp. 47~48.

가들과 전략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의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을 축소하는 것으로써 주한미군의 철수는 곧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포기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는 것이다.<sup>130)</sup>

한편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에 대해서는 본 평화협정의 군비통제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과 한국은 상호 체결한 군사동맹과 유사 동맹 관계가 본 협정의 당사자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부터 공격형 무장 병력과 전략자산을 수입하거나 배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했다.<sup>131)</sup> 이러한 내용의 협정이 체결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F-35, 첨단 정찰자산, 핵 잠수함 등을 포함하는 전략자산의 수입과 배치가 어려울 것이다.

최근 북미협상의 결렬과 남북관계의 악화와 함께 북한 당국과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는 한미 군사연습을 비난하는 담화와 남북관계 악화에 관한 성명과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단계적 군축’을 약속한 상황에서 한국의 미국 전략자산 도입 문제는 자칫 합의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 열강의 군사적 위협 대응에 필요한 첨단무기체계 구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북한의 반발을 줄이면서도 이러한 자주 국방 이행이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구축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

130) 진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중국의 입장,” p. 50.

131) 중국 측 시안, p. 3.

〈표 III-1〉 북한 당국과 언론의 한미군사연습 비난과 남북관계 악화에 관한 성명·보도

분류	날짜	제목 혹은 내용
북한 외무성	19.7.11.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담화: F-35A 도입 비난
	19.7.16.	대변인 담화: 합동군사연습 재개는 북미 공동성명 위반, 합동군사연습이 조미실무협상에 영향 주게 될 것
	19.8.6.	대변인 담화: 한미 합동군사연습개시 비난
	19.8.11.	미국담당국장 담화: 군사연습 해명 전에는 남북 접촉 어렵다
	19.8.22.	대변인 담화: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
노동신문 정세론 해설	19.7.28.	평화기류에 역행하는 위험한 소동
	19.8.11.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침합동군사연습
	19.8.14.	정세악화를 초래하는 무력증강책동
	19.8.14.	평화파괴범의 위험한 처사
	19.8.20.	〈연합지휘소훈련〉의 허울은 벗겨졌다(노동신문 논평)
	19.9.1.	위험한 선제공격기도의 발로
	19.9.11.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량난소동
	19.9.22.	정세악화의 책임을 오도하는 궤변
	19.9.29.	군사적 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한 술책(유엔사령부 비판)
	19.10.8.	수치스러운 외세추종정책의 산물(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비판)
19.10.10.	정세악화를 초래하는 미국산 무기구입책동	
기타	19.8.8.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선전국 진상공개장
	19.7.31.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정전협정은 시급히 폐기되어야 한다
	19.7.31.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평화와 전쟁연습은 양립될 수 없다
	19.8.17.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전쟁시연회로 얻을 것은 값비싼 대가이다
	19.9.15.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지역평화와 안정의 위험천만한 파괴자
	19.9.17.	민주조선: 상대가 누구인가를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19.8.26.	우리민족끼리: 상호존중, 대화? 뻔뻔스러운 녀석들!
	19.9.3.	우리민족끼리: 일고의 가치도 없는 대화와 협력 타령
	19.9.30.	김성 유엔대사 유엔총회 제74차 전원회의 연설: 북한을 겨냥한 최신공격형무기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 있는 한국의 이중적 행태 비판

출처: 일본 쓰다주쿠 대학에서 개최된 통일연구원과 조선대학교 교수들과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워크숍(2019.10.14.)에서 조선대학교 한 교수의 발표문 내용을 필자가 표로 작성

한미동맹과 달리 북중동맹의 변화와 조정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1961년에 체결한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근거로 현재의 상황과 대비하여 간접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이 조약의 제 2조는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원조를 제공한다”<sup>132)</sup>고 명시한다.

한편 이 조약은 1981년과 2001년 각각 갱신돼 2021년까지 유효하다. 이러한 북중동맹은 중소분쟁의 부산물 또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북한의 중국으로부터 경제 협력과 원조 획득 의도로 성립되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보았던 조약 제 2조의 자동개입 조항은 그 유효성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지만, 탈냉전의 도래와 함께 국제정치 상황의 변동에 따라 북중동맹조약도 부침을 겪고 있다.<sup>133)</sup>

예를 들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인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로 인해 북미 간 군사 충돌의 위험이 증대한 것은 북중 간 맺었던 조약에서 전혀 예견하지 못했고, 2001년 마지막으로 조약이 갱신되었을 때도 북핵 위험이 고조되기 전이었다. 중국은 동북삼성 지역에서 북한의 핵 활동 오염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한반도의 구조가 비핵화적인 방식으로 변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sup>134)</sup> 즉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으로

132)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1961.7.11. 재인용: 박주화·윤혜령,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01 평화·비핵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83.

133) 박병광, “북중동맹조약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소고: 한미동맹조약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6월호 (2012), pp. 35~39.

인한 북미 간 무력충돌 발생이 조약의 이행 여부를 얼마든지 재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중국은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면 북한은 중국 이외의 제3국의 편이 되든지, 붕괴하든지, 고립무원이 되어 다시 한 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 불리하고 한반도가 미국과 같은 해양 세력의 통제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북중의 전통우의관계가 여전히 중요하다. 다른 한편 중국은 북한과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의 관계도 평등하고 정상적인 정당관계로써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북중관계를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sup>135)</sup>

이러한 전통중시론과 국가이익론 모두 북한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데에는 동의하였으나 그 방식은 달랐다. 최근 북중 간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 최고지도자가 축전을 주고받고,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 인사들이 상호 방문하면서 북중 모두 전통관계를 다시 중시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sup>137)</sup> 하지만 이러한 전통관계 중시가 국익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과 미중 간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134) “中朝友好互助条约 中国是否应当坚持?,” 『环球时报』, 2017.5.4., <<https://mil.huaniu.com/article/9CaKrnK2qSI>> (검색일: 2019.10.24.).

135) 李敦球, “不能“放弃”朝鲜这65年的伙伴,” 『环球时报』, 2014.11.27., <<https://opinion.huaniu.com/article/9CaKrnJFTcF>> (검색일: 2019.10.24.).

136) 王洪光, “中国不存在“放弃朝鲜”的问题,” 『人民网-环球时报』, 2014.12.1., <<http://sd.people.com.cn/n/2014/1201/c172839-23066690.html>> (검색일: 2019.10.24.).

137) 북중관계의 이러한 ‘재정상화’는 북한이 향후 비핵화 논의를 고려하여 이중 헤징의 필요성과 중국이라는 경제적 후원 확보의 필요성과 함께, 중국이 대북한 영향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성 속에서 이익균형 형성이 양국 관계 재정상화의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논문을 참조. 이희욱,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과 북중관계의 ‘재정상화,’” 『중소연구』, 42권 3호 (2018).

상황에서 북중 사이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북중동맹이 앞의 평화협정에서 제시한 군비통제와 충돌하지도 않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중동맹은 병존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강화와 중거리 미사일 동아시아 배치 계획에 따라 북중/북중러 군사협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 나.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미중관계 제약

동북아에서 다자안보기제를 건설하는데 있어 중국의 인식은 우선 다층적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안전 수요는 무력 침범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을 요구하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발전의 안전 보장, 경제 사회 발전에 있어 간섭이나 침범을 받지 않는 것 등의 안전 요구가 포함된다. 결국 중국이 보기에 동북아의 다자 안보기제는 한반도 안전의 파생 문제와 미국과 중국의 안전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다층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기제에 대한 중국의 두 번째 전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의 관계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과정이 미일세력 견제에 도움이 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미국과 북한 사이에 급속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안보적·지정학적 완충지대였던 북한의 상실을 야기하는 것과 한중 및 북중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약화 초래를 우려했다.<sup>138)</sup>

138) 성기영 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실현과 국제협력』, pp. 124~125.

결국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과정에서 중국의 소외가 책임 대  
국으로서 위신 실추와 미국 주도의 한반도 질서 형성을 야기하는 것  
으로 판단했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중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 측 평화협정은 미중 양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의 대상  
범위 지역에 핵무기 사용이나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약  
속하고, 핵무기와 투발수단 그리고 전략자산을 전개, 배치, 통과시키  
지 않는다. 또한 평화협정 범위 내 국가의 정치와 경제체제를 전복시  
키지 않고, 제3자를 겨냥한 연합군사훈련을 시행하지 않는다.<sup>139)</sup>

미중 양국의 한반도에 대한 안전보장은 특히 비핵화와 관련하여  
핵무기, 투발수단, 전략자산의 전개, 배치, 통과 금지와 연합군사훈  
련의 군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이 민감해 하는 정치경제  
체제의 전복 금지까지 제시하고 있다.<sup>140)</sup> 미국 국회에서 통과되는  
북미 간 상호불가침 조약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이 책임지고, 미중남북 4자가 평화협정을 통해 사실 상의 북미 간  
상호 불가침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즉 북한이 미국과 단독으로  
불가침 조약을 맺기 힘들다는 전제 하에 북한이 안전 보장을 획득하  
는 것을 의미한다.<sup>141)</sup>

특히 최근 중국이 우려하는 바는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에서 탈퇴하  
면서 이 조약의 제한을 받는 육상기지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전  
면적인 연구 개발을 주장한 것이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아시아에

139) 중국 측 시안, p. 2.

140) 한국, 미국과 체제가 상이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국제사회가 보장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음을 참조. 정옥식, “정체불명의 ‘북한체제  
안전보장’, 이제는 쓰지 말자,” 『프레스시안』, 2019.4.2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8822>> (검색일: 2019.10.26.).

141) 중국 측 시안, p. 12.



육상기지 재래식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배치할 의도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평화협정에서 한반도의 남북 쌍방이 상대방이나 제3자를 겨냥하는 탄도 방위 체계를 배치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sup>142)</sup>

중국은 또한 이러한 미국의 행동을 의식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등 전통 우방과의 군사교류와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9월 러시아, 중국 등 7개국 군대가 참여한 대규모 군사훈련인 ‘첸트르(중부)-2019’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훈련에는 북한의 참관단도 파견되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무단 진입 역시 한미연합군의 대응 조치를 떠보고 전자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일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일본 혹은 괌 배치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대응하여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 및 조건부 연장과 한일 간 무역 갈등,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한 비핵화 촉진을 위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 등으로 한미일 삼각공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 24일에 중국 국방부는 1998년 이래 10번째 국방백서인 『신시대의 중국국방』을 발표했다. 국방백서에서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형세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군사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외향성 증가, 호주의 미국과의 군사동맹 공고화 등이 이 지역에 불확실성을 가져다주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반도 문제는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보았다. 중국은 이러한 형세 속에서 아시아 지역의 상

---

142) 위의 글, p. 21.

호 협력과 신뢰 구축 조치 회의 기제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아시아 안보관 수립으로 지역 안보 협력 틀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143)</sup> 중국 국방백서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의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인 신뢰구축과 대화 협력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미국의 군사동맹 강화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동아시아 다자안보 협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중갈등관계의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다자안보협력을 연동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중국의 한 학자는 6자회담과 9·19 공동 성명을 복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9·19 공동 성명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약속 대 약속, 행동 대 행동”이라는 실천 경로를 확립했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라는 원칙을 확립했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은 주권평등과 평화 공존의 기초 위에 동북아의 안전협력 기제 등 목표를 확립했다. 만약 6자회담이 복잡한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6자회담 기제는 성숙한 동북아 지역 안보 협력 기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sup>144)</sup> 하지만 과거 6자회담 관련국들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에 실패한 것을 감안할 때, 6자회담 복원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143) “新时代的中国国防,” 『新华网』, 2019.7.24.,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9-07/24/c\\_1124792450.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9-07/24/c_1124792450.htm)> (검색일: 2019.10.27.).

144) 杨希雨, “朝鲜半岛的“安全困境”及其出路,” 『国际问题研究』, 제1기 (2018), p. 71.

## 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양자관계 발전: 한중 협력과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미중의 한국과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더불어 한중의 북미관계에 대한 ‘감독(監督)’을 보충하는 것이 중국 측 평화협정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한반도는 특히 상호불가침에 대한 감독주체와 지역의 상호 불가침 실현 보장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한국과 중국이 이러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sup>145)</sup>

구체적으로 중국의 평화협정 시안 3장 3조는 북미가 동등하게 약속을 지키고 상호 존중하는 기초위에 상대방의 안전을 보장하고, 어떠한 형식의 무력이나 무력 위협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핵무기의 감축과 폐기 그리고 군사 배치·위협 축소와 같은 신뢰 구축 조치를 함께 시행하도록, 한국과 중국이 북미의 이러한 행위를 ‘존중(尊重)’하고 ‘보장(確保)’한다.<sup>146)</sup> 이러한 한중의 협력은 막중한 임무일 수도 있겠으나 북미 간 진정으로 상호불가침의 실현을 원한다면 한중의 이러한 책임은 결코 과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sup>147)</sup>

한국과 중국은 북미 간 될수록 많이 협상하고 소통하도록 돕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안전 우려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미중은 대국 전략 차원에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협조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를 진일보 완성하고 완결하도록 촉진한다. 한국은 미국을 설득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하며 북한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군사 훈련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남북 협력을 강화하며, 북미 간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활 작용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미 사이에 상호 신뢰를 쌓고 오해와 오판을 줄이도록 한

145) 중국 측 시안, p. 13.

146) 위의 글, p. 2.

147) 위의 글, p. 13.

국이 촉진할 수 있다.<sup>148)</sup>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동북아 다자안보기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당사자들 사이에 양자관계 발전이 우선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남북 간 양자관계는 평화협정의 다른 장에서 상호불가침을 규정했다. 평화협정의 ‘양자관계 발전과 지역 평화 추진’장에서 남북이 상호 정치 안전, 군사안전, 사회발전을 존중한 후 어떤 형식의 무력이든 사용하지 않고 사용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상호 불가침 협의를 엄격하게 준수한다고 강조한다.<sup>149)</sup>

이는 육상, 해상, 수역,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함으로써만 군사긴장과 충돌 근원을 제거하는 평화협정의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군사긴장 제거와 상호불가침 협정 체결, 중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경제발전을 수호하고 평화 협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완전한 화해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통일방안을 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협상이 쉬운 의제부터 시작하여 점차 의제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 한반도 경제협력 프로젝트, 기초설비건설 의제에서 시작하여 각종 문제로 확대한다.<sup>150)</sup>

북미 간 관계발전의 중요한 잣대는 바로 상설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미중 수교 모델과 유사하다. 1972년 2월 22일 닉슨(Nixon)과 저우언라이(周恩來)의 회담, 27일 미중이 「미중 공동성명」에 서명했고, 1973년 2월 22일 미중 양국은 각자 상대 국가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 1979년 미중은 수교와 관계정상화를 체결했다. 따라서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은 한반도의 긴장

---

148) 위의 글, p. 13.

149) 위의 글, p. 23.

150) 위의 글, pp. 23~24.

관계와 냉전 국면을 제거하고, 북미가 상호 화해와 이해에 도달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미국은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고 북한도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 이행을 모색할 수 있다.<sup>151)</sup>

미중공동성명에서 북미 관계정상화에 교훈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미중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미국의 사회제도 및 대외정책에는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양국은 각국이 사회제도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의 주권 및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 타국에 대한 불가침, 타국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원칙 하에서 관계를 실천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sup>152)</sup> 북미 사이에도 미중과 같이 체제와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상호 인정하면서 타국의 내정에 불간섭 원칙을 지킬 때 북미 간 신뢰가 조성되고 적대관계가 청산될 수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미/북일 관계정상화에 대해 찬성의 입장이다. 이는 북핵문제의 근원이 적대적 북미관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북미 관계정상화는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개방과 경제협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하지만 미중 경쟁구도에서 급속한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하는 입장이다.<sup>153)</sup>

과거 제 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에서도 북미와 북일의 관계정상화 조치 실시에 합의하고 실무그룹과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완전 이행을 논의할 것을 합의

---

151) 위의 글, p. 25.

152) 미중공동성명(상하이컴뮤니케, Joint U.S.-China Communique), 1972.2.28. 재인용: 박주화·윤혜령 편집,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04 해외평화협정』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5.

153) 崔志应, 『朝鲜半岛』 (上海: 同济大学出版社, 2009), pp. 197~198. 재인용: 성기영 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실현과 국제협력』, p. 124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공동성명과 합의는 쌍무·다자 경제협력 추진,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안정 수립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sup>154)</sup> 따라서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북미/북일 관계정상화의 양자관계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 라.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양자관계의 발전과 함께 북한의 각종 국제조직 가입을 통해 다자 안보기제를 형성할 수 있다.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각 측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감독과 함께 북한의 발전 안전 수요를 만족시키고, 북한의 비핵화 결심과 자신감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 금융, 안보 등 영역의 국제조직에 북한이 가입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만약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고 정치적인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 북한은 주변 국가와 협력하고 교통·물류 등 경제·산업을 발전시키며 중국과 러시아, 한국과 철도를 연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경제 금융 기구와 지역 안보 조직 등의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필요한 발전 자금과 전문지식을 얻는 동시에 북한 경제의 구조 개혁을 단행 할 수 있다. 동시에 동북아 경제협력체에 들어감으로써 제도적으로 핵 폐기 조치가 더욱 불가역적인 상황에 돌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sup>155)</sup>

중국 측 시안의 해설에서는 국제조직 가입과 대북 제재 해제의 시점을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56)</sup> 이는 북한의 찬성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미국의 경우 완전한

---

154) 김용현, “한반도 평화체제 체결 시 북한의 쟁점과 과제,” p. 77.

155) 중국 측 시안, pp. 25~26.

156) 위의 글, p. 25.

비핵화의 완성 이후 이러한 조치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의 반대  
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측 평화협정의 7장인 양자관계 발전과 지역 평화 추진에서  
또 다른 한계는 양자관계 발전에 비해 다자 안보협력 기제나 방법에  
대한 조항이 부족하다는 것이다.<sup>157)</sup> 한국 측 시안의 경우 제 8조 지  
역 평화를 위한 협력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동의를 전제로 한 6자회  
담 재개와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언급하고 있다. 더 나  
아가 한국 측은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까지 논의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sup>158)</sup>

과거 6자회담과 미래 동북아 다자협력 기구 간 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은 6자회담을 발전시킨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 형성의 긴  
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과 영향력 확대  
를 위해 다자경제협력의 유용성도 인정하고 있다. 즉 한반도 평화체  
제구축으로 지역운명공동체건설과 지역경제블럭화를 추진하는 것  
이 중국의 최종 목표이다.<sup>159)</sup>

하지만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이다. 미중 무역 분쟁과 패권경쟁, 북중 간 전통  
적 우호 협력관계 복원, 러시아와 일본의 역할 강화, 한일 무역 갈등  
과 지소미아 종료 등이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될 경우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반발과 저항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sup>160)</sup>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평화협  
정의 체결로 동맹체제에서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변환한다는 논리에

---

157) 위의 글, pp. 3~4.

158)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 pp. 45~46.

159) 진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중국의 입장,” p. 45.

160) 김용현, “한반도 평화체제 체결 시 북한의 쟁점과 과제,” pp. 77~78.

미국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공동의 위협요인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느낄텐데, 그러한 위협요인 및 공동의 인식과 평화협정사이에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는 데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평화협정의 주요 요소로 포함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sup>161)</sup>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트릴레마(trilemma)를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을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포함된 단계적 군축,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등에서 찾아 새로운 동북아 질서 수립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sup>162)</sup>

### 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관계 설정: 선후관계와 상응조치의 등가성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를 제기했다. 중국은 제재의 맹신과 압박을 무책임한 행위로 간주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병행 추진하는 쌍궤병행 협상방식을 제안한 것이다.<sup>163)</sup> 중국은 두 협상의 단계적 추진, 포괄적 해결, 동시 행동 입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바라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중단, 한미군사훈련 잠정 중단, 대화개시, 무력불사용, 불가침, 평화공존의 총원칙을 확정하고 핵문제 포함 모든 문제

161) 우정엽,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 쟁점과 과제: 미국의 인식에 대해,” p. 85.

162) 구갑우,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군사합의와 교류협력 분야의 성과와 과제,” (통일연구원 국제회의 자료, 2019.9.18.), p. 124.

163) 정성운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pp. 69~70.



를 일괄타결하면서 관계정상화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CVID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고, 비핵화와 군비통제 문제, 종전과 안전보장 제공의 유기적 결합을 추구한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019년 9월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 “정치적 해결의 기회를 다시 놓쳐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북미대화를 촉구했다. 왕 국무위원은 이날 “단계적이고 병행적으로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모든 당사국의 우려를 해결하며, 점진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로”라고 말했다. 또한 왕이는 유엔 안보리가 한반도 국면의 진전에 따라 북한 관련 제재 결의의 ‘스냅백 조항(可逆条款)’ 시행을 고려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동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sup>164)</sup>

중국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 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의 틀에 스냅백 조항 삽입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반도 상황 변화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어쨌든 대화의 지속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스냅백 조항을 통해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생각하는 평화협정의 목적은 북미 간 동시에 행동을 취하는 것이고, 북한의 궁극적인 핵보유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잠시 핵 보유 상태로 미국의 상응하는 대가를 교환하는 논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역시 핵 폐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 측이 생각하는 북한의 목적은 우선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핵 포기 과정 중 미국의 ‘성의와 대

164) “王毅谈朝鲜半岛问题：不能再错过机遇,” 『新华社』, 2019.9.28., <[http://www.gov.cn/guowuyuan/2019-09/28/content\\_5434333.htm](http://www.gov.cn/guowuyuan/2019-09/28/content_5434333.htm)> (검색일: 2019.10.23.).

가'를 보고 핵 포기 의 진도를 결정한다. 다르게 말하면 만약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핵 폐기 과정을 중단하고, 심지어 일부 핵무기를 보유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평화협정의 중심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이고, 그 핵심은 북한의 핵 포기이며, 한미 양국이 북한이 느끼는 '핵위협'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sup>165)</sup>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수 없게 된다면 미국은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동북아 지역을 더욱 분열시킬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목표인 주변국과의 공동 발전과 상충되는 것이다.<sup>166)</sup>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한국,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동기가 있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미국과 유엔 안보리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북한의 전략 중점인 경제 건설 실현도 어려울 것이다. 다른 한편 미국은 북핵을 핑계로 한국에서의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한반도의 냉전을 공고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미일 삼국의 군사압력에 직면하여 안보환경의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 반면 비핵화가 되면 북한은 경제 제재 해제뿐만 아니라 한미일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sup>167)</sup>

구체적으로 중국 측의 평화협정 시안은 비핵화의 즉각적인 집행을 요구하기보다 각 주체가 완전한 비핵화실현의 기본원칙과 전제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 기초를 구축하며, 북한의 경제사회발전 실현과 발전으로 평화를 구하고, 발전으로 안전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sup>168)</sup>

---

165) 중국 측 시안, pp. 31~32.

166) 위의 글, p. 17.

167) 위의 글, pp. 14~15.

168) 위의 글, p. 7.

한국 측의 평화협정 시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2020년 초 약 50% 진척될 것으로 가정하고, 그 시점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협정이 비핵화 완료를 촉진하도록 보장하는 효과를 상정했다.<sup>169)</sup> 반면 중국 측의 시안의 경우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 병행을 통해 비핵화의 원칙과 전제를 평화협정에 포함시키고, 평화협정에서 보장한 종전선언과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북한의 비핵화와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상정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한국 측 시안에 따라 2020년이라는 시한의 달성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고, 50%라는 구체적인 비핵화 진척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가 판단할 수 있는지의 구체적인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았다. 반면 중국 측 시안의 한계는 비핵화-평화협정 체결 동시 추진이 북한과 한국에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도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강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대북제재에 대한 결정을 쥐고 있는 핵심 당사자로서 미국이 이러한 방안과 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한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평화협정에서 비핵화의 주체는 북한과 미국이고, 중요한 관련국은 중국과 한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주체와 관련국은 함께 비핵화의 기한을 설정한다. 첫째, 핵무기, 핵물질, 핵 프로젝트, 핵 설비의 사찰, 불능화, 폐기 등의 기한이다. 둘째, 북한에 대해 단계별 안전보장 조치를 제공한다. 셋째, 안보리와 국제조직, 개별국가에서 북한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재 조치와 결의를 제거한다.<sup>170)</sup>

---

169)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 pp. 35~36.

170) 중국 측 시안, p. 2.

이는 중국 측 시안이 조치별 등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즉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단계별 안전보장 조치가 함께 묶여서 실행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합의 파기 유인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중국 측 평화협정은 비핵화+안전보장조치+제재해제의 동시적 단계별 진행을 요구함으로써 사소한 비핵화조치와 중대한 상응조치가 초기에 함께 실행됨으로써 발생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불이행 유인 증가를 어떻게 방지할 지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sup>171)</sup> 그리고 등가성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즉 북미 쌍방이 “자신의 행동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상대에게는 더 많은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sup>172)</sup>

중국이 이러한 등가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바로 2013년 말 우다웨이(武大偉) 당시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9·19 공동 성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제안한 안보-안보의 등가교환 제안이다. 주된 내용은 북한의 핵개발·제조·확산·비축금지, 한국의 핵무장 금지, 관계국의 한반도 핵 배치 금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관심사항을 해결하고, 한국, 미국, 일본과 북한의 관계 개선 및 북한 체제를 전복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포함했다. 하지만 중국이 제시한 이러한 등가교환은 당시 한국, 미국, 일본이 이 제안에 비핵화 사전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sup>173)</sup>

171) 비핵화와 상응조치 사이의 등가성과 등가성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조남훈, “북한 비핵화와 상응조치 전망,” (통일연구원 국제회의 자료, 2019.9.18.), p. 197.

172) 문장렬,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 평가와 과제,” (통일연구원 개원 28주년 학술회의 자료, 2019.4.17.), p. 10.

173) 조성렬,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론』 (서울: 백산서당, 2019), pp. 99~100.

중국 측 시안의 또 다른 한계는 비핵화의 비가역적 돌입지점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측 시안도 비가역적 돌입지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비핵화의 약 50% 진척과 평화협정 체결 시점을 연계시키는 안전장치는 마련했다. 중국 측은 비핵화 기한을 설정한다는 요구는 규정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불능화(disable) 같은 비핵화의 비가역적 돌입지점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돌입지점과 대북제재의 단계별 해제,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경협 유연화 등의 상응조치를 연계시킬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sup>174)</sup>

한편 비핵화 주체가 북미라는 사실은 쌍방의 요구가 주로 상대방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은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를 얻은 후에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미국의 우려는 만약 비핵화 성과 이전에 그러한 조치들을 논의한다면,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고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묵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한국 등 다른 국가들과 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을 제지할 수 있는 카드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sup>175)</sup>

반면 북한의 입장은 비핵화 각 단계마다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북한이 핵 신고를 하면 미국은 신고된 설비를 완전히 파악한 후 협상이 잘 안되면 신고된 시설을 미국이 공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sup>176)</sup> 그리고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 시험 중지,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발사대 해제 등 신뢰구축 조치를 취했으나 미국도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해 달라는 요구이다.<sup>177)</sup>

---

174) 비핵화의 비가역적 돌입지점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홍민, “북한 비핵화와 상응조치 방안,” (통일연구원 국제회의 자료, 2019.9.18.), p. 212.

175) 중국 측 시안, pp. 15~16.

176) 위의 글, p. 16.

비핵화와 상응조치 사이 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논문은 김일성 종합대학의 태형철 총장이 쓴 “조선반도비핵화과제와 <중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조미관계정상화>과제의 상관성에 대하여”이다. 이 논문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일방적인 핵 포기가 아니며 북한 핵보유의 발생원인인 미국의 핵위협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핵위협을 느끼는 원인은 미국의 방대한 양의 핵무기라는 물리적 요인과 함께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다. 우선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북미 사이에 적대관계의 청산으로, 이는 북미 관계정상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중전선언의 발표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78)</sup>

북미가 이처럼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북한의 ‘생존전략’과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이 계속 충돌을 빚고 타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중전선언을 거부한 데는 중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고려함으로써, 중전선언 체결로 주한 미군의 존재가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미일동맹과 주일 미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미 간 교착상황의 배경에서 중국은 대안으로써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을 제안한 것이다.<sup>179)</sup>

177) 김용현, “한반도 평화체제 체결 시 북한의 쟁점과 과제,” p. 75.

178) 태형철, “조선반도비핵화과제와 <중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조미관계정상화>과제의 상관성에 대하여,” 『정경론집』, 17호 (2018), <[http://kancc.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22309](http://kancc.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22309)> (검색일: 2019.10.24.).

179) 진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중국의 입장,” pp. 47~49.

〈표 III-2〉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선후 관계에 대한 북미 간 시기 별 입장차이

	6자회담	1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
미국	선 핵폐기 후 평화협정	선 핵폐기 후 종전선언	선 핵폐기 후 제재완화
북한	선 평화협정 후 핵폐기	선 종전선언 후 핵폐기	핵폐기와 제재완화 동시 진행

출처: 진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중국의 입장,” (통일연구원 국제세미나 자료, 2019.8.30), p. 49의 내용을 필자가 표로 작성.

중국의 한 학자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자꾸 결렬되는 또 다른 이유 양자 간 신뢰부족 때문이라고 보았다. 미국 내에서는 강경파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하고, 북한의 진정한 목적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북한은 비핵화를 시행했을 때 자신의 안전보장에 대해 우려했고, 한반도에 미군이 배치된 것은 전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억지하려는 것으로서,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했다.<sup>180)</sup>

러시아 역시 북한·중국과 같은 입장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는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북핵 폐기와 보상이 단계적,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원칙을 제시했고, 「중러 공동행동계획」에 합의함으로써 두 국가의 이러한 합의된 원칙과 입장을 표명하였다.<sup>181)</sup> 지난 2017년 5월 발표된 「중러 공동행동계획」은 아래 표에서 보면 1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2단계와 3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1단계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촉구했지만, 한미가 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이 아닌 규모의 축소나 유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싱가포르 회담에서 스톡홀름 실무회담까지 오면서 북미는 여전히 1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180) Wu Jingjing,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Prospects,” *China International Studies*, May/June (2019), p. 141.

181) 우준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 쟁점과 과제: 러시아,” p. 97.

앞으로의 협상타결 전망이 더 어두운 이유는 중리의 계획과 북한의 접근방식 모두 완전한 비핵화를 논의하기 전에 북미 관계정상화와 제재완화 및 제도 안전을 조건으로 내세우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의 완전한 비핵화의 일괄타결 이전에 그 어떤 제재 해제와 제재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는 북미 관계정상화도 꺼려한다는데 협상의 난점이 존재한다.

〈표 Ⅲ-3〉 중리 공동행동계획과 북한의 접근방식 비교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중리 공동 행동계획	북한, 전략도발중단 한미, 연합훈련중단	북미 관계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지역안보체제 논의
북한의 접근 방식	북한, 핵·ICBM 실험 중단 한미, 연합훈련 중단	북한, 영변핵시설 폐기 한미, 민수분야 제재완 화+제도안전	북한, 완전비핵화 논의 한미, 북미 관계정상화, 평화체제구축

출처: 이종구, “북한의 단계적 조치 요구와 비핵화 협상,” <[http://www.jpi.or.kr/kor/regular/policy\\_view.sky?code=archive&id=5723](http://www.jpi.or.kr/kor/regular/policy_view.sky?code=archive&id=5723)> (검색일: 2019.10.23.).

중국 측 시안에 의하면 완전한 비핵화 실현 조치들은 핵 시설의 폐기, 핵무기와 핵물질 수량의 신고, 일정한 중량을 초과하는 탄두를 적재한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을 신고하며, 고농축 우라늄 후처리 시설과 분리 시설을 신고하는 것이다.<sup>182)</sup>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sup>183)</sup>

한반도의 비핵화는 ‘6가지의 불(不)’ 조치를 포함한다. 즉 핵무기의 실험, 생산, 비축, 경유(운송), 배치, 사용의 금지이다.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 생산과 운송수단에 직접 사용되는 물질과 재료도 금지한다. 운송수단은 유엔 안보리와 국제조직에서 규정한 항공기, 육지와 수상 및 수중 운반 수단을 포함한다. 핵 보유 국가는 한반도에 대해 핵무기와 핵 운반수단을 사용하거나 사용 위협을 가함으로써

182) 중국 측 시안, p. 2.

183) 위의 글, p. 14.



써 위력 과시를 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sup>184)</sup>

본 평화협정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안전 약속은 미중과 한중의 안전보장 조치이다. 즉 3장의 상호불가침과 안전보장 조치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전략자산 사용을 금지하고, 국가의 정치·경제 체제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킨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상호 불가침과 신뢰 구축 조치들을 감독하고 보장한다는 전제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실현 조치들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 완료 이후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한국과 북한에 제공하는 확장 핵역지(핵우산)의 철수 포함 여부이다. 한국 측 시안에는 4조 2항의 대안에서 확장 핵역지의 제공 불가를 언급하고 있다.<sup>185)</sup> 하지만 중국 측 시안은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핵보유 국가인 유엔 상임이사국들이 연합으로 한반도에 핵우산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sup>186)</sup>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에서 확장 핵역지의 제공은 중요한 요소이고 북한의 비핵화 완료 이후에는 논쟁 사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측은 이러한 논쟁으로 인해 평화협정의 체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확장 핵역지 제공 주체를 미중에 국한하지 않고, 좀 더 공정하게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국 측 평화협정 시안에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안전장치로 유엔 안보리의 발의, 미중 양국의 약속과 보장과 함께 남북한이 핵무기와 관련 운송수단, 전략자산 사용, 사용 위협, 배치, 경유, 연

184) 위의 글, p. 2.

185)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 p. 47. 이 밖에도 핵우산 제공을 금지하는 평화협정 시안은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이 있다. 평화·통일 연구소,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p. 36.

186) 중국 측 시안, p. 19.

구·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한반도 비핵화 지역(비핵지대) 조약을 공동으로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87)</sup>

한국 측에서 작성한 시안 4조 5항의 한반도 비핵지대화과 함께 8조 2항에는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6자 간 안보협력 협상 의제로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이는 중국 측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만 언급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sup>188)</sup> 러시아와 중국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고, 일본의 핵무장 반대와 미국의 핵전략자산의 동북아시아 전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인 바 비핵지대화의 지리적 범주를 한반도로 국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는 의견이 있었다.<sup>189)</sup>

반면에 동북아 비핵지대화는 미중러와 같은 공식 핵보유 국가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미중의 핵무기 배치를 제한함으로써 실행 가능하고, 일본의 핵무장을 영원히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유효하다는 것이다.<sup>190)</sup>

마지막으로 중국 측 시안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안보우려 해결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시 특히 북미 사이에 정치적 해결을 지지하고,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우려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시 주석이 했던 발언을 주목해 볼 때, 한미의 안전보장과는 별도로 중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안전보장 조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측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첫째, 정치상의 안정감이다.<sup>191)</sup>

---

187) 위의 글, pp. 2~3.

188)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 p. 46.

189) 우준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 쟁점과 과제: 러시아,” p. 97.

190) 조성렬,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론』, p. 248.

191) 중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안전보장 조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중국 측 시안, p. 32.

즉 중국 공산당의 강한 집권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정치적 우위를 통해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정감이다. 조선 노동당의 집정 능력과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집단지도체제의 우위를 발휘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것이다.

둘째, 안보상의 안정감이다. 북중은 「북중우호협력조약」이 있다. 이 조약은 양국 정치와 안보 관계를 확정하는 가장 유효한 도구로써 북중의 상호 신뢰를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약이다. 우선 이 조약은 정치적 보증이고, 다음으로 안전상의 무조건적인 보증으로써, 북한의 모든 안전 위협은 북중 양국이 공동으로 담당하며, 이는 북한의 안전 원천이다.

셋째, 국제적인 안정감이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보면 한미를 신뢰하지 않고, 북한의 정치 체제 자체가 미국의 주적으로 간주되는데다 미중 간 대항과 분쟁으로 인해 이러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따라서 만약 중국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인하기 원한다면 북한의 자기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고, 이는 다시 거꾸로 북한의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과 관련하여 중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및 해체와 검증 시 북미관계 개선과 함께 북중 우호 관계 강화로 사드 철수를 연계시킬 수도 있다.<sup>192)</sup> 장기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이완 역시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sup>193)</sup>

---

192) 중국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 1998년 이래 10번째인 2만 7000자의 『신시대 중국 국방』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형세 총체적 안정' 부분에서 미국은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배치와 간섭을 확대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안보에 복잡성을 더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HAD, 사드) 체계 한국 배치는 지역전략균형을 심각하게 깨뜨리고, 지역 국가의 전략안보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新時代的中國國防,” 『新華網』, 2019.7.24.,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9-07/24/c\\_1124792450.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9-07/24/c_1124792450.htm)> (검색일: 2019.10.27.).

193) 윤영관 편, 『한반도 2022 비핵화·평화정착 로드맵』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pp. 81~82.

#### 4. 평화협정의 이행담보와 한반도 통일: 감독 집행기구·분쟁 되돌리기(Rollback, 争端回卷) 기제 확립과 중국의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지지

중국 측의 평가에 따르면 9·19 공동성명이 그나마 가장 성공에 가까웠던 비핵화 행동 지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마땅한 성과 없이 협상이 끝났던 이유는 일정한 권위를 가진 강력한 관리 집행기구가 설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상응하는 인센티브(incentive)와 징벌 기제가 없었기 때문이다.<sup>194)</sup>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한반도 비핵화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군축과 더불어 관련된 국제조약에 가입한다. 특히 북한은 평화협정 발효 후 90일 내에 대인지뢰금지조약, NPT,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다시 가입하도록 중국 측 평화협정 시안은 규정하고 있다.<sup>195)</sup> 북한은 1993년 3월, 2003년 1월에 NPT 조약에서 탈퇴했기에 평화협정을 통해 이러한 사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우선 NPT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핵보유 국가는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이들이 연합으로 한반도에 핵 보호(핵우산)를 제공한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국가 신분으로 NPT에 재가입하고, 화학무기금지협약과 생물무기금지협약에도 가입한다.<sup>196)</sup>

유엔 상임이사국 전체의 동의가 없이는 북한의 이러한 조약 탈퇴를 금지하고, 임의로 탈퇴하거나, 북한이 대규모 살상 무기,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등을 은닉한 것이 발각될 경우 발견한 시점까지 이미 해제한 모든 유엔 제재를 자동으로 회복시키는 스냅백 조치를 시행한다.

---

194) 중국 측 시안, p. 21.

195) 위의 글, p. 3.

196) 위의 글, p. 19.

마지막으로 북한은 어떠한 이유로도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혹은 유엔 안보리가 권한을 부여한 기타 국제기구의 북한에 대한 수시 출입과 사전 미고지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서도 안 된다.<sup>197)</sup>

한편 평화협정의 이행담보를 위해 중국 측 평화시안에는 유엔사를 해체하고 평화관리기구인 한반도평화관리위원회로 이를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 행정, 외교, 법률, 군사 영역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본부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설치하고, 위원회는 감독, 안전, 정치, 경제 등의 분과 위원회를 하위에 두어 위원회의 결의를 감독하고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sup>198)</sup>

여기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유엔사령부의 지위 및 존폐 여부이다. 중국과 북한은 유엔사에 반대하고 정전협정의 산물인 유엔사는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서 그 기능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미국은 유엔사를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유사시에 전력 제공자의 역할로 그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 중국, 미국, 한국 4자가 유엔사령부의 존폐 여부와 지위에 관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sup>199)</sup>

최근 북한은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유엔사령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노동신문 9월 29일자 정세론 해설에서 “미국이 유엔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오히려 그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외세의 군사적 지배를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우롱”이라면서 이를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한 술책으로 표현했다.<sup>200)</sup>

---

197) 위의 글, p. 19.

198) 위의 글, p. 3.

199) 김용현, “한반도 평화체제 체결 시 북한의 쟁점과 과제,” pp. 78~79.

200) “군사적 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한 술책,” 『노동신문』, 2019.9.29.

다른 한편 중국 측 시안에서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부분은 위원회의 군사관리 기능이다. 위원회는 4자가 파견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비무장화 추진, 군사 관련 문제 처리, 군사 관련 상황 관리와 관련 무기 장비 처분 등의 문제협상 의무를 가진다.<sup>201)</sup> 하지만 이러한 군사기능은 자칫 잘못하면 중국군을 한반도로 불러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구성의 위원회가 더 적절할 수 있다. 또한 핵 폐기에 상응하는 정치보장과 경제발전 보장 역할을 한반도평화관리위원회가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02)</sup>

한반도평화관리위원회의 상급 기관으로써, 강제력을 지닌 기구인 국제감독위원회는 4자 구성으로 설치되고, 감독·집행 기능이 부여된다. 위원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며, 유엔 안보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상응하는 군사 행정 기능을 행사한다. 평화관리위원회, 국제감독위원회와 당사자 4개국 사이의 관계는 어느 정도 독립적이다. 평화관리위원회는 행정집행 기구로서 안전, 경제, 협력 등 문제에서 감독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고, 감독위원회는 유엔 안보리의 수권으로 안보리의 한반도 문제 직책을 대신 수행한다. 감독위원회의 인원은 각국 정부가 파견한 인원이 직무를 행사한다.<sup>203)</sup>

마지막으로 평화협정의 유효한 보장과 감독을 위해 8장에 발효, 성과 정착(成果固定), 분쟁 되돌리기(Rollback, 争端回卷)를 제시했다.<sup>204)</sup> 한반도평화관리위원회는 평화협정의 확인 종료일까지 성과를 판정(裁定), 확인(确认), 정착(固定)시킬 책임과 의무를 지고, 4자 각 주체의 최고 관리감독자가 이를 확정한다. 평화협정의 이행

---

201) 중국 측 시안, p. 22.

202) 위의 글, p. 22.

203) 위의 글, p. 22.

204) 위의 글, p. 4.

과정을 수시로 기록하고, 점진적인 성과의 축적도 모두 기록하며, 매일의 진행 과정과 집행상황을 기록 보관하여 당사자가 확인한다. 성과의 의미는 매일의 일별 진도와 분쟁 발생 시점까지의 진전을 말한다. 그 내용은 각 당사자가 형성한 일체의 문건, 성명, 조약, 의정서, 컨센서스(consensus) 등이다. 이 기초 위에 관리감독 문건(监管确认文件)을 완성한다.<sup>205)</sup>

평화관리위원회가 분쟁 해결을 할 수 없거나 성과 정착에 합의를 이룰 수 없을 때 각 주체 감독자들은 분쟁 사실과 과정을 기록하고, 성과 공고화 문건(成果固定文件)을 분쟁 발생 시점으로 돌린다.<sup>206)</sup> 이는 분쟁의 발생으로 분쟁의 원인이 되는 이슈 외에 다른 합의까지 무효화하는 조기수확의 후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제이다. 분쟁 되돌리기 기제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비핵화, 평화협정 관련 합의와 성명, 조약, 의정서, 컨센서스가 특정 이슈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무효화되는 최악의 상태를 방지하여 분쟁 발생 이전에 했던 약속과 합의까지라도 꼭 그 조기수확을 공고화하려는 의도로 만든 핵심적인 기제이다.

다음 쟁점으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지지성명」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중국 측 입장이다.<sup>207)</sup>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이유는 첫째, 분단된 한반도는 역외 강대국이 내정에 개입할 핑계를 제공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주한미군이다. 둘째, 한반도의 분단과 남북 대치는 남북 어떤 국가와도 진정한 우의와 신뢰 관계를 건설할 수 없도록 만든다. 셋째, 한반도 분단과 이로 인한 긴장 관계는 지역의 전쟁과 충돌

---

205) 위의 글, p. 26.

206) 위의 글, p. 4.

207) 중국 측 시안의 부속 성명.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연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sup>208)</sup>

중국의 한반도자주평화통일에 대한 지지입장은 1995년 11월 13일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江澤民)이 방한했을 때, 장쩌민 주석의 성공적인 방한에 대해 인민일보가 게재한 사설인 “이해 증진, 협력 촉진”에 잘 드러난다. 중국은 “한반도의 민족화해와 국가의 자주평화통일 실현을 진정으로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중국의 이러한 한반도 통일 정책 지지의 의미는 외세 개입 특히 미국 주도를 반대하고, 통일 후 정부는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미중 사이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다.<sup>209)</sup>

구체적으로 중국 측이 보는 남북한의 통일은 흡수통일을 지양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지지한다. 즉 일종의 경제협력 특구와 자유왕래 지역의 확대 등을 통해 둘 사이에 정치, 안전, 경제 발전 상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남북이 동일 민족이라는 인식과 통일에 대한 염원이 있다는 전제하에 상호 존중, 공생 발전을 추구하면서 남북의 특수성으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한 뒤 결국에는 그러한 특수성이 일종의 지역별 차이처럼 되거나 지역별 성격 차이가 되어 급진적인 통일이 가지고 오는 부작용을 줄이면서 통일을 실현한다. 즉 결국에는 중국 측이 보기에 남북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써 협력을 통해 국경과 민족심리 차이를 제거한 후에 통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sup>210)</sup>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후진타오

---

208) 중국 측 시안, p. 28.

209) 위의 글, pp. 28~29.

210) 위의 글, p. 32. 한국 측의 경우 아직까지 평화협정에서 북한을 국가로 명시하는데 대한 국내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당사국 대신 ‘당사자’로 표기하는 것을 선호한다.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 p. 46.



(胡錦濤) 시기보다 시진핑 시기에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즉 시진핑 시기는 한반도의 통일이 양안의 통일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담론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었다. 통일 후 한국이 주도하더라도 한국이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가 상승했다.<sup>211)</sup>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태도 변화의 기회를 살려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5. 소결

중국 측 시안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당사자 관련 입장은 남북미중의 4자가 평화협정의 포괄협정, 「한반도군사영역의정서」, 「한반도 종전, 상호불가침, 안정의 공고화(落實穩定)에 관한 의정서」,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 설립에 관한 의정서」, 「국제감독위원회 설립에 관한 의정서」, 「한반도 평화협정 적용 경계선 및 분계 도시(圖示)」 총 5개의 부속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은 별도로 「중화인민공화국의 한반도자주평화통일지지성명」을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중국의 당사자 지위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며, 중국이 그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는 6자회담에서 중국이 의장국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정전협정 체결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평화협정과 군사영역의정서의 당사국으로 들어가 있어 군사 영역에서 중국의 참여에 대한 한국 혹은 미국 측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남북 간 군사신뢰구축과 군축 조치 이행, 사드를 포함한 한중 간 안보 우려 해소, 미중 간 군비 경쟁 완화 등의 조건이 선결된다면 중국의 참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

211) 윤영관 편, 『한반도 2022 비핵화·평화정착 로드맵』, p. 215.

당사자 문제에서 두 번째 쟁점은 미중의 역할과 지위이다. 중국 측 시안에서는 한반도의 무정부 상태를 통제하기 위해서 두 강대국의 ‘공동 관리와 단속’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 관리와 단속은 중국 측 설명에 따르면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단속이 아니라 평화체제 실현 과정 중 미중 간 경쟁 관계를 피해야 한다”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다. 물론 평화체제에서 미중의 당사자 역할이 중요하지만, 남북이 풀어야 할 한반도 문제까지 미중이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남북의 자율성과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은 미중과 긴밀히 협력하고 미중의 협조를 구하되 자율성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한미/북중 양자 동맹과 다자안보체제로써 군비통제, 미중관계, 양자관계 발전,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등을 포함한다. 이 주제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우선 주한미군의 지위, 한미연합훈련의 목적과 성격 재조정의 문제이다. 주한미군이 제3국 즉 중국을 겨냥하지 않고, 제3국을 겨냥한 필요 이상의 무기·전략자산의 수입·배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한미군사훈련은 규모를 축소하고, 훈련 내용도 반테러리즘과 인도주의의 비전통 안보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다. 북중동맹에 대해서도 평화협정 당사자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제3국으로부터 공격형 무장병력과 전략자산 수입·배치를 금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중국 측 시안에는 제3국을 겨냥한 필요이상의 무기와 전략자산의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즉 각 당사자들이 무기와 전략자산을 도입하고 배치할 때 보통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정당화하고, 특정한 위협에 대응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분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상대방이 느끼는 위협은 객관적인 지표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필요이

상'이라는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무기와 전략자산 도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 측에서 제시한 평화협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한국과 중국이 북미관계와 북미 간 상호 불가침을 감독하고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받아들이는 북미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 조항 자체는 지금까지 다른 평화협정 시안에서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다. 즉 북미 간 비핵화, 군축, 신뢰구축, 불가침의 조치에서 협상과 소통을 촉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바로 한국과 중국이 책임진다는 것이다. 물론 한중이 북미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직접 해결하거나, 북미 간 발생할 수 있는 협정·약속 위반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하거나, 혹은 약속이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없겠지만, 초기적인 단계에서 한중이 북미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중국의 동북아 다자협력 논의는 주로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은 중국 측 시안에 국제조직 가입과 대북 제재 해제 시점을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과정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미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비핵화 조치가 완료된 이후를 북한의 국제조직 가입과 제재 해제의 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측 시안은 지역 평화 협력에서 6자회담과 이를 발전시킨 다자안보협력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평화협정의 당사자 외에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어떤 안보협력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이 평화협정을 한반도 내로만 제한함으로써 동북아 정세와 지나치게 연계되어 발생할 수 있는 협정 이행의 지연을 사전에 막으려는 좋은 의도일 수도 있겠으나,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

화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선순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 번째 주제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관계로써 비핵화 주체인 북미와 중요 관련국인 한중이 함께 단계별 비핵화, 안전보장 조치, 제재 해제에 기한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 측 시안이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단계별 상응 조치 사이에 등가성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측 의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묶일 수 있는지에 대한 등가성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속협정이나 다른 협정을 통해 그러한 기준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비핵화 관련 또 다른 쟁점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써, 중국은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 전복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이는 북한의 안전 우려를 고려한 내용으로 한국의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우려하는 바는 한반도에 미국에는 우호적이지만 중국에 적대적인 통일 국가가 들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측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 전복 금지라는 비핵화의 상응조치를 통해 한반도에 중국과 유사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체제를 간접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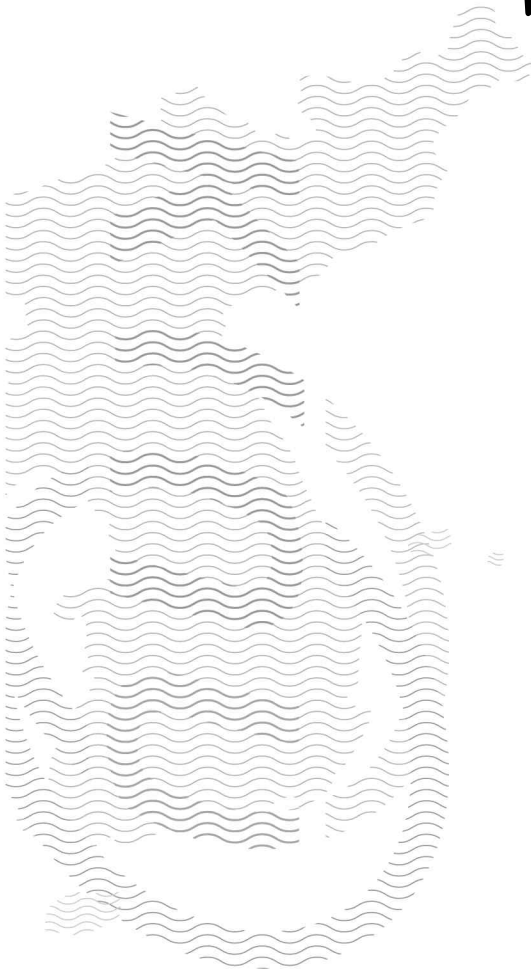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평화협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에서 중국 측이 제시한 쟁점은 유엔사를 해체하고 한반도평화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체하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유엔사 해체에 찬성하지만 미국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한편 평화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평화협정의 당사자인 4자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감독하는 4자로 구성된 국제감독위원회도 설치한다. 하지만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자신을 감독하는데서 오는 감독의 불공정

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의 이행 담보를 위한 또 다른 조치는 성과 정착 절차와 협정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가 곤란할 경우 분쟁 발생 시점 이전으로 돌아가 분쟁으로 인해 조기수확이 사라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절차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의 행동을 제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 IV.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중 입장 비교와 미중관계







지금까지 살펴본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 내 논의를 종합하여 본 장에서는 두 국가의 입장을 비교할 것이다. 특히 평화협정 당사국 문제에서는 당사국 지위와 역할 규정의 쟁점, 한미/북중 양자동맹에서 다자안보체제로의 전환인지 아니면 양자동맹과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의 병행인지에 대한 논의,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의 관계에서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새로운 계산법의 가능성, 평화협정의 이행담보에서는 유엔사 해체 문제와 평화협정의 감독·집행기구 설치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 1. 평화협정 당사국 문제: 당사국 지위와 역할 규정

평화협정의 당사국 문제에 관해 미국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미중 간 경쟁 혹은 대립관계가 평화협정 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미 관계정상화 문제도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조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국내정치적 비용을 감안하여 협정으로 체결할 것인지에 따라 미국의 당사국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 내에서 6자회담과 같은 다자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논의와 체결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배제할 의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에서 중국을 제외할 경우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중국의 참여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평화협정에 중국이 당사자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고 폼페이오 국무 장관도 10월 8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1990년대 미국은 남북한이 평화협정의 핵심당사자이지만 미중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남북미중의 4자 기본협정, 남북 양자협정과 북미 양자협정의 부속협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12)</sup> 하지만 미중관계가 전략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분쟁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에 와서 과연 미국이 중국의 평화협정 참여에 동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과거 쉘리루(崔立如)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의 의견은 1단계에 미국, 북한, 중국의 3자 정전협정의 종결 선포를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단계로 남북, 미중의 4자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sup>213)</sup> 이러한 방식은 새로운 시도이지만, 정전협정 체결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과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한국을 빼놓고 정전협정 종결 선포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중국 측은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상실우려, 과거 6자회담 의장국이자 중재자로서의 역할 경험,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세 가지 이유로 자신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주장한다. 미국이 당사자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은 4자의 포괄협정과 부속협정 체결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평화협정 당사국 문제에서 미중 입장의 쟁점은 중국의 당사자 지위에 대한 분명한 의견 표명이고, 6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러시아와 일본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이다. 미국 내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정부 입장은 아니지만 6자회담과 같은 다자대화를 발전시켜 평화협정 논의와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중국 측 시안에서는 평화협정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에

---

212)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파주: 푸른나무, 2007), p. 52.

213) 위의 책, pp. 60~61.

의미를 크게 부여하여 정전협정과 상관없는 러시아와 일본을 배제하는 것을 상정했다.

북한은 1998년 6월 유엔사령부-북한군 장성급회담에서 한국을 당사자로 인정한 남북미 3자의 잠정평화협정을 제안한 적이 있다. 2005년 한성렬 유엔대표부 차석대사의 미국 측과 비공식 접촉에서도 남북미 3자의 잠정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다.<sup>214)</sup> 판문점선언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은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의 회담 개최에 동의했다. 따라서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에서 미국의 동의만 있다면 중국을 포함한 4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쟁점은 4자의 당사자 포괄협정 체결로 할 것인지 아니면 2+2로 남북 당사자와 미중 보증자로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우선 한반도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 양국이 당사자가 아닌 보증자로 지위를 바꾼다면 평화체제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해 주는 셈이다. 명확한 역할과 의무 설정 없이 보증자라는 막연한 지위를 부여하면 당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고, 협정 이행과정에서 간섭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한국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전쟁 발발의 경우 전쟁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 보증자가 된다면 평화의 제도화 실현은 어려울 것이다.<sup>215)</sup> 중국 역시 북중 동맹관계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하면 과거 한국전쟁처럼 개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당사자 역할이 중요하다.

---

214) 위의 책, p. 47.

215) 평화·통일 연구소,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pp. 46~47.

마지막 쟁점은 남과 북의 법적 지위이다. 중국 측 시안 해설의 경우 남과 북의 자주평화통일을 지지하면서 남북이 사실상 국가대 국가로 그 지위를 인정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더 빠른 지름길일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중국 측의 생각대로 남북이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한다면 한국에서 이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평화협정 자체가 한국 전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국내 헌법 개정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남남갈등과 헌법 논쟁을 피하고 평화협정의 신속한 체결과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국 측 시안과는 다르게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평화협정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up>216)</sup>

## 2. 한미/북중 양자동맹에서 다자안보체제로의 전환 혹은 병행

미국 측이 한미연합훈련과 한미동맹에서 평화협정 체결 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한반도에서 핵 항공모함, 핵잠수함, 핵무기 운반수단 등 모든 핵 능력 플랫폼의 철수를 북한이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미국 내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미군 주둔을 원할 수도 있는 이유로 일본의 재무장화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동북아의 안정화 실현을 위해 주한미군이

---

216) 위의 책, p. 48.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측 시안에서는 한국과 북한이 각각 연합훈련 규모와 장비를 제한하고, 훈련의 상호 감시와 사전 통고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와 연기를 결정했고,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따라 한미군사훈련의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 의회와 군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으로 한반도에서 연합군의 준비태세가 약해진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아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토대로 미국은 한미의 의지에 따라 주한미군 축소와 철수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중국 측은 주한미군의 지위조정과 한미군사훈련의 규모 축소, 훈련 내용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더 이상 북한이나 제 3국을 겨냥하지 않고, 제 3자를 겨냥하는 공격형 무장병력과 전략자산 수입과 배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유엔사 해체 이후 한미군사훈련은 제 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규모를 축소하는 구조적 군비통제를 시행하며, 연합군사훈련의 내용을 반테러리즘과 인도주의 등 비전통 안보 관련 훈련으로 전환하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요구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최종적인 화해 실현 조건 하에 한미 양국의 동의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최종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조정과 거취를 자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미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보는 측면이 강한 반면, 중국 측 시안에서는 남북관계의 화해와 발전 상황 속에서 한미군사훈련의 조정을 인식한다는 차이가 있다. 미중의 공통점은 한미동맹 혹은 북중동맹의 취소 혹은 군사동맹 금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측 통일연구원 시안은 한국과 북한이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한미는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통제 혹은 2020년 이내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규정했다.<sup>217)</sup> 한국 측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은 주한미군, 한미군사동맹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고 주한미군 철수, 기지 철거, 군사동맹 금지를 주장했다. 즉 북핵 폐기, 미군철수, 남북 상호 군축을 연계시킨 것이다.<sup>218)</sup>

특히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은 동시행동의 원칙으로 3년 내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 기간에 북은 핵무기를 폐기하며, 남북은 상호군축을 이행한다는 제안을 했다.<sup>219)</sup> 기한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까지는 바람직하지만, 2000년대 초 한미 간 합의된 미군기지 재배치로 미군기지 전체 80개 가운데 54개만 반환되고, 나머지는 환경오염 치유비 부담 관련 논란으로 19년이 지난 2019년까지도 여전히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3년 내에 주한미군 철수는 너무 무리한 요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를 평화협정에 포함시킨다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로 적절한 기한을 다시 정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하면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을 제외한 미중과 한국 측 모두 완전한 주한미군 철수, 군사동맹금지보다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주한미군의 구조적 혹은 운용적 군비통제에 동의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미중 간 군비 경쟁이나 갈등적 관계가 협력적 관계로 전환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군축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면 주한미군과 한미군사훈련의 점진적인 축소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217)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 p. 43.

218) 평화·통일 연구소,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p. 43.

219) 위의 책, p. 56.

한편 미국 내에서 동북아 지역안보 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핵이 없는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장치로서 이를 고려한다. 또한 미국이 동북아 안보 체계를 생각 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issile Defense: MD)와 동아시아 내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유지로써 이 두 가지가 동북아 안보 기구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미국은 이것을 지지한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현상타파 국가들에 대한 균형정책과 견제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안보 체계는 당연히 미중관계와 미러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 측이 바라보는 동아시아 다자안보 기구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 다층적 안전관리의 측면에서 동북아 다자안보체계의 필요성이다. 이 기구는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과 경제 발전에 대한 수요와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다층적으로 만족시키는 성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지역 평화 사이의 관계로써 중국 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이 미일 세력 견제, 대한반도 영향력 확보, 책임대국 위신을 세우는 것과 같은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고, 미국 주도의 한반도 질서 형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상정한다.

그리고 중국 측 시안이 지역평화 추진을 위해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국제사회편입이다. 즉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 추진 과정에서 다른 당사자들의 감독 하에 북한이 자신의 발전과 안전에 대한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국제기구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의 경제 금융 조직과 동북아 경제협력체 등에 가입하는 것을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고려하고 이를 통해 비핵 프로세스의 불가역성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 다자기구에 대한 필요성은 둘 다 인정하지만 그 목적과 의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미국은 주로 자신의 미사일 방어체제와 군사력 확대 수단과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을 고려하는 반면, 중국은 미일 세력 견제와 미국 주도의 한반도 질서 형성 방지와 같이 주로 미국을 의식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를 원한다. 따라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가 이러한 미중 경쟁과 상호 견제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중관계의 갈등과 경쟁이 완화되고 협력과 협조가 증가될 수 있도록 주변국 혹은 당사국들이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안보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에서 한반도 차원과 동북아 차원을 연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남북한의 평화공존이 동북아 정세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다.<sup>220)</sup> 전자와 관련하여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중단기적으로 동북아 차원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후자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관계 발전과 자율성을 확보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의 확고한 구축 이후 동북아 안보체제의 선순환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221)</sup>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마지막 쟁점은 동맹과의 병행 혹은 공존 가능성이다. 다자 체제와 동맹의 공존을 위해 우선 비핵 프로세스와 남북한 평화협력 프로세스의 불가역성을 강화함으로써 평화적 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맹의 군사·안보적 특징을 줄이고, 정치·외교적 기능을 늘림으로써 동맹의 성격

220) 정성운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pp. 41~43.

221) 이수형, “동북아 공동안보의 쟁점과 과제: 한반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관성,” 『INSS 전략보고』, no. 41 (2019), pp. 7~8.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포용하는 공동안보에 근거한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과 동맹의 공존이 가능하다.<sup>222)</sup>

### 3.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의 관계 설정: 새로운 계산법의 가능성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의 관계 설정에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비핵화 없이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협상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북한의 핵 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공고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미 간 신뢰구축이 먼저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은 제시되기 어렵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미국 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중국에서 제시한 쌍궤병행을 동의하는 소수의 의견과 비핵화 다음에 평화협정이 오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이 있다. 포괄적인 비핵화 이행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완벽한 비핵화 이후의 평화협정 체결은 비현실적이며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탄두 폐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까지 협정 체결을 연기하는 정도를 대안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 측 시안에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기반한 안보협력 구축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다소 급진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

222) 위의 글, p. 9.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부 공식입장과도 맞지 않는다. 즉 미국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 기조로 CVID에서 최근 불가역성을 생략하고 검증을 강조하는 FFVD로 변경했고, 선 비핵화 후 상응 보상 조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측은 일관되게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의 쌍궤병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 중국 입장에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든 진전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협상 당사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이 이해하는 미국의 의도는 자명하다.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의도는 우선 평화협정 체결 후 핵 포기를 하겠다는 것이고,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의 '성의와 대가'를 보고 완전한 비핵화의 수준과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상응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핵 포기 조치를 중단하고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도이다.

이처럼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미국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 의도는 쉽게 바뀌기가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 기대하는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은 바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이 이행할 필요가 있는 완전한 비핵화 단계와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규정하고 단계적이고 동시에 이를 이행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아가자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러한 새로운 계산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미국이 비핵화 협상 타결 지연 혹은 실패를 구실로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이 지역을 더욱 분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관계 설정과 관련하여 미중 간

쟁점이 되는 것은 북한에게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중국의 쌍궤병행 방안 혹은 그와 유사한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이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대신 수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미국이 이를 거부한다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계속 교착상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고 기존의 입장을 조정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인 구축 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은 상응조치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과 해석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가운데 민수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의 해제만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이를 사실상의 전면적인 제재 해제로 해석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보다 좀 더 완화된 입장을 취한다면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어느 정도 이행할 경우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안전보장과 경제 제재 해제를 기한을 정해 단계별로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북미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함께 비핵화의 기한, 단계별 안전보장 조치의 기한, 유엔 안보리와 개별 국가의 대북 제재 해제 기한을 확정한다. 이는 북한과 미국이 주로 양자 간 이러한 비핵프로세스를 이행하려는 것과 달리 중국 측은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확대된 협상을 제시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평화체제의 모든 당사자가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기한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행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합의를 도출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제재 해제를 둘러싼 쟁점은 북한 비핵화의 어느 정도 수준과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상응조치(안전+제재해제)를 하느냐의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증가성의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하더라도 비핵화의 초기 조치 이행 이후에 남북경협이 허용 정도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 때 북한이 제시한 영변핵시설의 폐기와 남북경협(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허용을 교환의 증가로 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조치로써 제시한 파격적인 조건들이다. 한반도 비핵지대화과 한반도에서 미중의 핵무기와 전략자산 사용금지,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 전복 추구 금지, 한국과 중국이 북미 상호 불가침과 신뢰 구축 조처들을 감독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실상 모든 안전보장 옵션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중국 측 시안 해설에 따르면 중국이 개별적으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안전보장 조치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통한 안정적인 정치 환경에서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다는 모범과 모델을 제시하는 정치상의 안정감이다. 두 번째는 안보 상의 안정감으로써 북중우호협력조약 속에서 안보상의 공동위협에 대해 함께 대처하고, 전쟁과 같은 위협에 직면했을 때 자동 개입하는 조항이다. 세 번째는 국제적인 안정감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할 때 체제 보장과 안정을 위해 중국이 협조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입장차를 고려하여 미중이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주로 대북제재의 완화, 제재의 단계별 해제, 대북 인도적 지원 허용, 남북경협의

유연화, 북미 관계정상화 등의 상응조치를 주로 전담하고, 중국은 한반도 비핵지대, 북한의 체제 보장, 북미상호불가침 등의 안전 혹은 안보상의 상응조치를 주로 전담하는 역할분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쟁점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의 관계 설정이다. 중국 측 시안에서는 한반도 비핵지대만 규정하는 반면 한국 측 통일연구원 시안은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6자 간 안보 협력 협상 의제로 논의할 것을 제시했고,<sup>223)</sup> 한국 측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의 당사국 범위가 평화협정의 틀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이행 의무를 ‘노력한다’로 표현했다.<sup>224)</sup>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중국과 미국의 시안 모두에서 나온 제안으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는 러시아와 일본 등 관련국들과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4자를 당사자로 하는 평화협정 내에서 다루는 한계가 있다.

#### 4. 평화협정의 이행담보: 유엔사 해체 문제와 평화협정 감독 집행기구 설치

평화협정의 이행담보와 관련하여 미국 측에서는 유엔사의 해체와 함께 평화협정 감독 기구로써 한국, 북한, 미국으로 구성된 3자 한국평화위원회, 중국, 러시아, 일본, 스웨덴을 포함하는 7자 국제평화감독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한다. 한국평화위원회는 남북 간

223)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 p. 46.

224) 평화·통일 연구소,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p. 55.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이행 감독 역할과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러한 미국 측 시안의 제안은 비교적 급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 비교적 설득력을 얻고 있는 논조는 유엔사 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유엔사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쉽게 개입 할 수 있고, 한반도 군사작전 시 일본 내 7개 유엔사 기지 사용 권한을 보장받으며,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한국군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다. 미국은 오히려 유엔사의 역할을 확대하여 동아시아 역내 우발 사태에 대비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활성화 하는데 한국을 작전사령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북한보다는 중국을 경계 하려는 전략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따라서 미국의 기본 입장은 유엔사를 보존하되 북한이나 중국의 반발과 저항이 심할 경우 유엔사의 완전 폐지보다는 소속을 변경하거나 한반도 평화위원회 혹은 국제평화감독위원회 같은 별도의 한반도 평화 이행 감시 기구 창설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의 입장은 유엔사 폐지를 주장한다. 이는 한국 측 평화협정 시안 역시 유엔사 폐지를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즉 정전협정의 산물인 유엔사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서 당연히 그 기능이 정지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유엔사 해체의 이유로 유엔사 설치의 전제였던 한국 전쟁의 중단, 정전 뒤 미군 이외 거의 모든 연합군이 한국에서 철수, 1975년 미국의 유엔사 자진 해체 결의안 제출, 대부분의 군사시설에서 유엔기 철거, 유엔사의 정전 임무 수행 방기, 유엔사의 법적 근거 실효 등이다.<sup>225)</sup>

지난 2019년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작

---

225) 위의 책, pp. 70~75.

권의 한국군 환수 이후 국지 도발 등 위기 발생 시 유엔사령군이 한국군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를 놓고 미국의 입장은 가능하다는 것이고, 유엔사가 상황에 따라 전작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한미 양국이 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때 합의한 바에 의하면 미래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연합군 부사령관으로 임명될 뿐 아니라 평시와 전시 모두를 포함한 완전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와는 반대로 미국은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유엔사령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sup>226)</sup>

이러한 미국의 시도는 한국군에 대한 월권행위로 비쳐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안보적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작권을 환수하고 정전협정 관할권 조정을 통해 그 일부 혹은 전부를 한국 합참이 인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sup>227)</sup>

다음으로 평화협정 집행 감독 기구의 구성과 역할을 비교해보자. 중국 측 시안은 4자로 구성된 한반도평화관리위원회와 국제감독위원회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측에서는 평화협정 감독기구로써 한국평화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 북한, 미국의 3자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국제평화감독위원회는 중국, 러시아, 일본, 스웨덴을 포함하는 7자로 구성하여 당사국 간 이견 조정 기구의 역할을 한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는 평화협정의 이행 감독 주체에 중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미국 측 시안은 한국평화위원회의 구성을 중국을 뺀 3자로 구성하고, 국제감독위원회에 중국을 포함시킴으로써 평화협정 이행 담보에서 중국의 역할을 중재와 조정으로만 제한

226) 이수형, “전작권 환수 관련 유엔사의 입장과 우리의 대응방안,” 『이슈브리프』, 통권 146호 (2019), pp. 2~3.

227) 위의 글, pp. 3~4.

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평화협정의 당사국들 가운데 중국만 유일하게 평화협정 이행 감독 역할에서 배제된다면 중국 측으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소지가 있다.

한편 중국 측에 따르면 4자로 구성된 평화관리위원회의 기능 중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군사관리와 상응조치 추진 기능이다. 즉 위원회는 비무장화 추진 협상, 군사관련 문제 협상, 군사 관련 상황 관리와 관련 무기 장비 처분 등의 협상 의무를 지니고, 핵 폐기에 상응하는 안전보장과 경제 발전 보장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평화관리위원회는 집행기구고, 국제감독위원회는 의사결정과 감독 기구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협정 이행담보를 위한 기구 구성이 남북미중 4자 당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평화협정 의무를 이행해야 할 당사자가 자신을 감독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러한 기구를 구성하는 국가들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국제법상 중립국, 한국전쟁에 교전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는 나라”와 남북미중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기울지 않는 나라를 제시했다. 그 기준에 따라 스위스, 인도, 말레이시아, 스웨덴, 브라질이 선정될 수 있다.<sup>228)</sup>

이 방안의 단점은 이들 국가들이 과연 남북미중 각각의 당사자와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감독의 역할을 선뜻 나서서 수행하겠느냐는 인센티브의 문제이다. 즉 이들 국가들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화협정 이행 감독을 수행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물질적인 혹은 제도적인 인센티브의 확립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

228) 평화·통일 연구소,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pp. 125~126.



마지막으로 평화협정의 이행 담보를 위해 중국 측 시안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조기수확과 분쟁 이전 상태 복귀(Rollback) 조치이다. 성과는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매일의 성과를 수시 기록 보관하고, 롤백 조치는 협정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합의까지 무효화하는 성과의 후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분쟁 발생 시점으로 성과공고화문건을 역진시키는 것이다.

## 5. 소결 및 미중관계에 대한 함의

정리하면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는 미중이 비교적 합의를 이루는 쟁점이다. 즉 미중 모두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 체결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단계별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일부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과 북미 관계정상화 선행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견해도 있지만, 4자의 평화협정 체결은 비교적 합의된 사항이다.

한미동맹과 군사훈련에 관해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다른 부분은 바로 군사훈련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규모와 장비 제한, 훈련 상호 감시와 사전 통고와 같은 절차와 규모 조정의 제한된 변화 속에서 훈련 내용 변경에 관한 언급은 피한 반면, 중국의 경우 군사훈련의 규모 축소와 함께 훈련 내용에 제3자 겨냥 금지와 비전통 안보 훈련으로의 전환이라는 더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최종적으로 한미의 동의 하에 연합군사 훈련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미의 반발을 우려하여 ‘한미의 동의’라는 조건을 붙인 것이다.

또 다른 이견은 미국 측 시안에서 장비 제한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과는 다르게 중국은 공격형 무장역량과 전략 자산의 수입 및

배치 금지라는 비교적 자세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중국의 의도는 ‘필요 이상’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평화체제의 도래와 함께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한국의 미국 전략자산 수입 및 배치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중 간 비교적 일치하는 의견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미동맹(북중동맹)과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 성격과 기능이 어떻게 변하든 미국과 중국 모두 남북 양측의 군사동맹의 폐지와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중 전문가들 사이에 주한미군의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에 관한 논의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그리고 북중동맹을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시킬지가 관건이다.

유엔사 존속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측과 미국 측 시안 모두 유엔사를 해체하고 평화협정 이행 감독·조정기구의 설립에 동의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유엔사 해체문제는 논란이 있고, 미국은 오히려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유엔사 기능을 유지 혹은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시안 내용과는 다르게 유엔사를 유지한 채 역할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크다. 즉 미국은 다국적군을 통해 한반도 내 작전권을 확보하고 미국의 동북아 정책 기지로서 유엔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관계 설정 쟁점에서 미국 측 시안은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기반한 안보협력 구축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다소 급진적인 것으로써, 보통 미국 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이행과 순차적 이행의 두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의 주류는 압박과 관여 기조로 선

비핵화 후 상응조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쌍궤병행과 함께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중국 측 시안은 남북의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미중 시안의 공통점은 한반도 비핵지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전문가 논의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한국과 관련하여 중국이 비핵화와 안전보장조치를 연계 시키면서 사드 철수와 한미동맹의 이완 유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미중 간에 의견이 다른 것은 중국은 북한이 다른 주권국가와 마찬가지로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이용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부시 정부 이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포함하여 북한은 그 어떤 목적의 핵 이용 계획도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229)</sup> 미국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면 미중 간 입장이 충돌할 수도 있다.

마지막 쟁점은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이다. 미국 측 시안은 6자 지역안보협의회와 한반도 주변 지역 핵무기자유구역(비핵지대화)을 통해 동아시아 다자안보 구축 논의를 이끌고 있는 반면, 중국은 양자관계 발전과 북한의 국제사회편입이라는 측면에서 동아시아 다자안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 논의에서 보듯이 동아시아 다자안보에 대한 미중 양국의 의도와 목표가 충돌된다는 점이다. 즉 미국은 자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동아시아 내에서 자국의 군사적 영향을 최우선시 하는 반면, 중국은 미일 세력 견제, 대한반도 영향력 확보, 책임대국 위신 제고, 미국 주도의 한반도 질서형성 방지 등의 목표로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력을 추구한다는 사실이다.

---

229) 杨希雨, “中美关系中的朝核问题,” 『国际问题研究』, 제3기 (2015), p. 30.

〈표 IV-1〉 한반도 평화체제 쟁점에 대한 미중의 입장 비교

쟁점	평화협정 시안		전문가 논의	
	미국	중국	미국	중국
평화협정 당사국 문제	남북미중 4자. 의회협상력 감안 협정이 아닌 조약체결 고려	4자의 포괄협정과 부속협정 체결 지지	미국이 평화협정 당사국으로 참여하면 북미 관계정상화가 선행. 현재 미중갈등이 평화협정체결에 걸림돌	1단계: 북미와 중국 3자 중전선언. 2단계: 남북미중 4자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과 군사훈련	한국과 북한 각 연합훈련 규모와 장비 제한, 훈련 상호 감시와 사전 통고, 북한이 핵능력 플랫폼의 철수 주장 시 미국과의 평화협정에 부정적 영향	주한미군의 법률 지위 조정 요구, 북한과 제3국 겨냥 금지, 필요 이상의 공격형 무장역량과 전략자산 수입 및 배치 금지, 한미군사훈련의 규모 축소와 군사훈련 내용은 제 3자 겨냥 금지와 비전통 안보 훈련으로 전환, 한미의 동의하에 훈련 최종 취소	주한미군 철수는 미중 세력 경쟁의 영향 받음, 미 의회와 군관계자 한미군사훈련 중단 우려, 협정 체결 이후에도 미군 주둔 가능	주한미군은 한미 간 문제로써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 인정, 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 방지 위해 주한미군 철수 직접 거론 회피
유엔사 존속 문제와 평화협정 이행담보 기구 설치	유엔사의 해체, 평화협정 감독 기구로써 한국, 북한, 미국으로 구성된 3자 한국평화위원회, 중국, 러시아, 일본, 스웨덴을 포함하는 7자 국제평화감독 위원회 설치	유엔사 해체 후 한반도평화관리 위원회와 국제감독위원회가 평화협정 이행 및 감독, 두 위원회는 한미북중의 4자로 구성	유엔사 재활성화,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유엔사 기능 유지 혹은 확대, 다국적군 통해 한반도 내 작전권 확보, 미국의 동북아 정책 기지 활용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의 대체로 정전협정 산물인 유엔사도 그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

쟁점	평화협정 시안		전문가 논의	
	미국	중국	미국	중국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의 관계 설정	한반도 비핵지대에 기반 한 안보협력 구축을 통해 북한 비핵화 유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의 <b>쌍궤병행</b> , <b>동시적이고 단계적</b> 방안, 비핵화와 군비통제 문제와 종전선언과 안전보장 제공의 유기적 결합 추구, <b>남북이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체결</b>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이행 입장과 순차적 이행 입장이 대립, 하지만 미국의 공식 입장은 <b>압박과 관여 기조로 FFVD 비핵화</b> 이행, <b>선 비핵화 후 상응 보상 조치 원칙</b> 고수	쌍궤병행을 대체로 지지하고, 중국은 <b>비핵화와 안전보장 조치 및 사드 철수를 연계할</b> 가능성 존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하는 동시에 <b>한미동맹의 이완 유도</b> 전략
동아시아 다자안보 협력과의 관계	<b>6자 지역안보협의회</b> 와 같은 주요국 중심의 안보협의회 창설, 한반도 주변을 <b>핵무기자유구역</b> 으로 설정하여 북핵 비핵화 협상 이행과 감시를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	<b>한반도 비핵지대화</b> , <b>미중의 남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한중의 북미 간 불가침 이행에 대한 감독 병행</b> , 남북의 상호불가침과 북미 관계정상화, <b>북한의 국제사회면입</b>	미국이 동북아 안보 체계를 생각 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b>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와 동아시아 내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유지</b> 로써 이 두 가지가 동북아 안보 기구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전제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이 <b>미일 세력 견제</b> , <b>대한반도 영향력 확보</b> , <b>책임대국 위신을 세우는 것</b> 과 같은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고, <b>미국 주도의 한반도 질서 형성을 방지</b> 하는 차원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상징

출처: 저자 작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미중관계가 주요한 변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미중관계에서 한반도 문제는 최우선 논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국이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과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비록 한반도 문제가 미중 갈등 속에 종속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중 협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양측에 한반도 문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미중관계의 다양한 시나리오 유형에 따라 한국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중관계가 ‘복합적 관계’로 가는 경우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과 한국의 주도력을 발휘하여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동아시아 평화협력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 문제가 미중의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미 공조와 함께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만약 미중관계가 ‘전략적 갈등’으로 치닫는 경우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휘방자 역할이 대두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북한 압박과 중국 설득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협력’ 시에는 남북미중의 4자 틀 내에서 미국을 통해 중국을 제약함으로써 중국이 국익관철을 위해 4자 구도 외곽에서 북중, 중러, 북중러와 같은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해야 할 것이다.<sup>230)</sup>

종합하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중의 입장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쟁점인 연합군사훈련 성격 규명과 훈련의 최종 취소 여부, 한반도에서 전략자산의 수입과 배치, 유엔사의 존속 문제, 비핵화와 평화협정 사이의 관계, 동아시아 다자안보 협력의 목표 충돌 이슈에 있어 미중 간의 갈등을 억제하고,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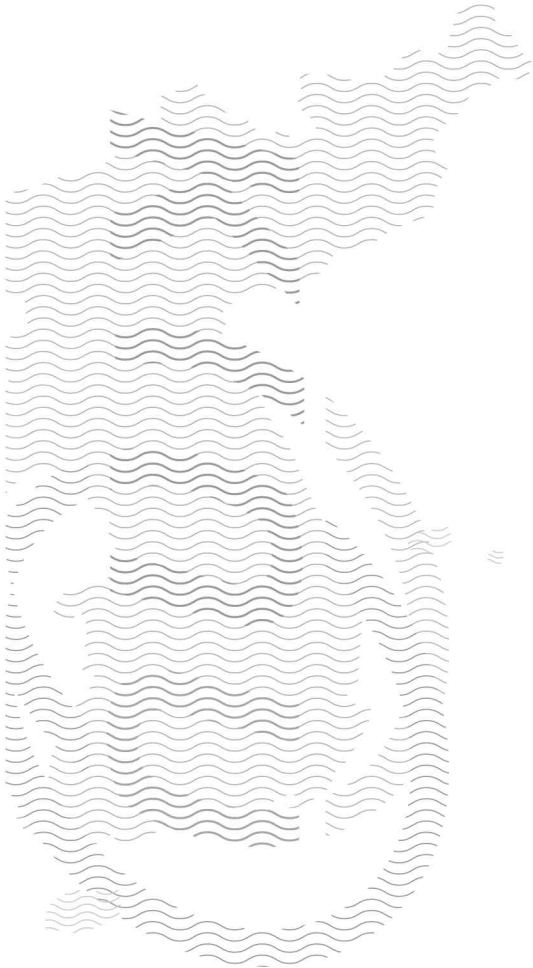
230) 신중호 외,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254~261.

인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장인 결론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미 협력, 대중 협력, 한미중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V. 결론





2019년 6월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회담을 가진 뒤 3개월 만에 북미 예비접촉과 실무협상이 지난 10월 4일과 10월 5일 각각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하면서 협상은 결렬되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9월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조미 협상이 기회의 창으로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는 미국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 측 실무담당자인 외무성 순회대사 김명길은 9월 20일 담화에서 “미국 측이 이제 진행될 조미협상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기대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낙관하고 싶다”고 밝혔다. 9월 16일에도 북한은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명의 담화로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주장은 단계적 동시적 접근법을 미국이 새 계산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데 반해 미국은 포괄적 합의를 주장하면서 비핵화 정의에 대한 인식공유, 비핵화 경로와 타임라인을 포함한 로드맵, 협상 중 모든 핵 활동 동결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한 이행을 동시·병행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북미 간 실무협상에 임하는 의도도 약간 다르다. 북한은 실무접촉을 북미 3차 정상회담으로 가기위한 징검다리로 간주하는 반면 미국은 실무접촉에서 기대하는 성과가 나와야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sup>231)</sup> 그 성과는 일종의 조기수확으로 영변 핵시설+α(기타 시설)의 폐기와 한미 군사 연습조정이나 종전선언 등 안전보장 조치를 주고

231) “북미, 3개월 만에 만남 재개… 실무협상 전 이례적 예비접촉,” 『경향신문』, 2019.10.2.

받는 것이다.<sup>232)</sup> 이 밖에도 가능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는 평양 주재 미국 연락사무소 개설, 대북 인도 지원, 인적 교류 확대 같은 체제 보장 조치이다. 알파는 추가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일부 폐기나 대량살상무기 동결 등이 거론된다.

이에 비해 이번 실무협상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정제유 할당량 확대, 북한 노동자의 귀환 기간 연장 등 대북제재 관련 조치는 미국에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다. 우선 유엔 대북제재의 경우 안보리의 결정사항이기에 미국 단독으로 북한과 합의하기가 힘들고, 미국의 독자 제재도 미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하기에 이번 예비 접촉과 실무협상에서는 북한이 영변+α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 제재 완화나 해제 관련 옵션은 논의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망대로 북한도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고, 미국도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따라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인 단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 직접 협상과 병행하여 한국의 대미, 대중 협력을 통한 간접적 비핵화 협상 지원과 촉진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미중 소다자 협의체와 한미중 워킹그룹회의 창설이 시급히 요청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미 협력 방안, 대중 협력 방안, 한미중 협력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

232) “북, 미국과 5일 실무협상 … 김명길·비건, 새 계산법 찾을까,” 『한겨레』, 2019.10.2.

## 1. 대미 협력 방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동차, 무기 구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 및 한일 갈등 분야에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및 주한미군기지 반환, 방위비 분담 협상 등에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이러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의 전시작전권 회수, 주한미군기지 반환, 방위비 분담 협상 문제에 미국의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얻어내기를 원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 간 여러 가지 가능한 갈등 현안들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유지·강화와 양국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협상 타결 조건 성립이 모두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18년 남북의 판문점 정상회담 후 북미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는 대북 정책 관련 한미 간 공조의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하노이 북미회담의 실패로 북한은 그 책임 일부를 남한에 전가하여 한미 간 공조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 간에는 여전히 비핵화 전략을 둘러싼 정상, 외무장관, 대북정책대표 등 다차원의 협의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북핵 공조와 달리 방위비 분담문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체계 편입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 한일관계, 통상문제 등에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특히 한국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대해 미국은 유감을 표명하고, 유엔사령부의 역할 강화도 논란이 되었다.<sup>233)</sup>

미국이 우려하는 점 중의 하나가 한반도 평화체제가 한미동맹, 더 나아가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 구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대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미국이 동맹을 미국만이 가진 비대칭적 전력 자산으로 간주하는 만큼, 한국이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점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

특히 비핵평화 프로세스에서 남북미 삼각관계의 정상가동을 위해 한국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균형점을 찾고, 한미 간 전략 공조 하에 한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하는 것이다.<sup>234)</sup> 김정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북핵 협상에 대한 연내 타결을 강조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선 일정으로 인해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을 수 있다. 최소한 2020년 상반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정책보다는 국내 정치에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선 일정을 고려하여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일정을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미국 관련 주목해야 할 사건은 바로 미국의 INF 조약 탈퇴이다. 1987년 미국과 소련은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9년 8월 3일 미국이 이 조약에서 탈퇴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미국의 INF 조약 탈퇴는 역내 다자 간 군비통제가 남북 군비통제와 병행 혹은 선순환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배치를 요구할 경우 수용 여부와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반발과

233) 서보혁,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KINU Insight』, no. 6 (2019), pp. 5~8.

234) 위의 글, p. 12.

저항에 대응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sup>235)</sup>

따라서 미국에 대해 우려되는 사항은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한반도 비핵화 이상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북미 간 합의나 비건(Steve Biegun) 특별대표의 연설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북한의 잠재력만 언급을 하지 동아시아의 안보 협력과 다자안보체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상 한반도 평화체제가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와 다자 안보협력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sup>236)</sup>

한편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 회견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한 참여를 알린 것이다. 한국은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한국의 신북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공통 관심사와 이익을 발굴하여 이들 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는 미중의 협력적인 관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볼 때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인한 변화 중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한미동맹과 유엔사 문제일 것이다. 한국 정부는 유엔사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sup>237)</sup> 미국 정부의 지지를 이끌

235) 김주리,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KINU Insight』, no. 3 (2019), p. 16.

236) 서재정,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와 미국,” (통일연구원 조찬간담회 자료, 2019.8.1.), p. 6.

어내기 위해서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정전협정이 아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지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평화협정 체결을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근거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sup>237)</sup>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가진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주한미군은 전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평화협정과는 무관하다”며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심지어 통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sup>239)</sup> 한국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여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유엔사 문제에 있어, 비록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유엔사의 법적 지위는 약화될 수 있으나 유엔사의 주둔이 자동적으로 불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유엔사의 해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한 만큼 한국은 유엔사의 기능과 위상을 재조정할 때 유엔사가 한국의 평화체제의 보장과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현재 미국은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는 한미 간 논의의 중인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유엔사가 한반도에 존재하며 기능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한국 역시 유엔사 회원국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미국의

237) 조찬래,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p. 167; 정한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쟁점과 전망,” p. 182.

238) 정한범, 위의 글, pp. 172~174.

239) “문재인 대통령, ‘한 대통령 최초’ 폭스뉴스와 인터뷰,” 『국방일보』, 2018.9.26.,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80927/68/BBSMSTR\\_000000010026/view.do](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80927/68/BBSMSTR_000000010026/view.do)> (검색일: 2019.10.21.).



바람과는 달리 유사시 유엔사가 제공하는 전력을 운용하는 ‘전쟁수행 당사자’이자 ‘전력제공국’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선호해왔다.<sup>240)</sup>

따라서 미국의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오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체결에 있어 유엔사 역할의 재설정 에 대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만큼,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미국의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 논의와 이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한국 측의 의견을 타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평화체제 혹은 통일 한반도 하 미래의 유엔사가 한국 안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sup>241)</sup> 또한, 유엔사를 국제적 합의에 따른 평화 관리 기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국과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sup>242)</sup>

마지막으로 한미워킹그룹(working group)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은 2018년 11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 공동 주재로 첫 번째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협력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논의 했고, 워킹그룹 회의를 한미공조와 협력의 체계화·정례화 수단으로 추진하기로 했다.<sup>243)</sup>

---

240) 장광현·최승우·홍성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UNC)의 전력 창출에 관한 연구: 현대전쟁을 통해 본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참여 배경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0권 제4호 (2017), p. 109.

241) 위의 글, p. 108.

242) 이수형,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계성,” 『통일과 평화』, 제2호 (2009), p. 55.

243) “한미 워킹그룹 회의 개최 결과,” 2018.11.21.,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76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76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검색일: 2019.10.26.).

이 워킹그룹 회의의 핵심 의제는 바로 미국이 한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서 남북협력이 북미협상을 앞서감으로써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에 이완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워킹그룹회의를 정례화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선대학교의 한 학자는 한미워킹그룹이 남북 협조의 후퇴를 야기했다고 보았고, 북한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명백히 드러난 한미실무팀의 실체(2019.3.21.)”에서 한미실무팀의 실체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주종관계, 그것이 남북관계발전에 미치고 있는 ‘심각한 부정적 후과’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sup>244)</sup>

이 밖에도 한미워킹그룹 회의의 부정적인 역할은 지난 10월 2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났다. 그는 “남한은 올 초 북한에 타미플루(Tamiflu) 지원을 결정했고 북한도 이를 받으려고 개성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으나,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가 타미플루를 싣는 차량에 대북제재를 걸고 넘어지면서 무산됐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 이 사건에서 발단이 되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그는 주장했고, 10월 15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평양에서의 남북 축구경기도 한미워킹그룹 때문에 남북 협의가 지지부진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한미워킹그룹이 가지는 한미관계의 효용성은 있지만, 본래 목적에 합당해야 한다. 관세청처럼 마치 세관 검사하듯이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것은 근본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권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sup>245)</sup>

244) 통일연구원 워크숍 자료(2019.10.14., 일본 쓰다주쿠 대학교).

245) “대북 타미플루 지원 못한건 한미워킹그룹 때문,” 『아시아경제』, 2019.10.2.,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00215041171475>> (검색일: 2019.10.26.).

지난 10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남북관계의 단절이나 남북경협의 중지를 의미 한다기보다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지만, 한국 정부가 관련문제를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불만이 고조된 것이라는 해석이다.<sup>246)</sup>

물론 한미워킹그룹 회의와 유엔사가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유도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었던 긍정적인 측면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겠지만, 이처럼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와 전략적 소통을 통해 한미워킹그룹회의와 유엔사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포괄적인 원칙과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 2. 대중 협력 방안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 중국이 러시아와의 군사교류 강화를 통해 대응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무단 진입 역시 이러한 대응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한중 간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직통전화

---

246) “김정은, 금강산 철거 지시 왜? ... “한미워킹그룹 사사건건 발목”, 『톱데일리』, 2019.10.24.,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60169>> (검색일: 2019.10.26.).

설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 간에는 이미 MCRC(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중앙방공통제소)와 중국 북부전구 간 직통 전화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핫라인(hotline) 설치가 최근 한중 국방전략대화의 의제로 올라왔다.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2011년 시작되어 2014년까지 정례적으로 열렸지만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여파로 중단되었고, 5년 만인 지난 10월 21일 재개되었다. 전략대화에서 한중은 한국 제2중앙방공통제소와 중국 동부 전구 간 직통전화 추가 문제를 논의하였다. 10월 21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사오위안밍(邵元明)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은 군사교류 방안을 협의했고, 20일 박차관은 웨이펑허(魏凤和)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군사협력 방안과 고위급 교류 강화를 논의했다.<sup>247)</sup> 이처럼 한중 국방전략대화와 같은 대화 기제를 통해 한중 간 군사교류와 사드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사소통과 고위급 교류, 전문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과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시기에 중국군 지도부는 한국 측과 북한 문제를 놓고 위기 관리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sup>248)</sup> 이러한 중국의 인식 변화를 기회로 삼아 한국은 중국과의 위기관리대화 채널을 확대하고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방안 개발을 위해 한중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2016년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방안을 내놓고, 2016년 국가안전위원회 내 전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자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위원회 위원장 푸잉을 팀장으로 하는 한반도 태스크포

---

247) “한-중, 5년만에 국방전략대화 “공중 핫라인 더 늘려야.” 『한겨레』, 2019.10.22.

248) 윤영관 편, 『한반도 2022 비핵화·평화정착 로드맵』, p. 214.

스(Task Force)를 설치하여 대한반도 정책 연구에 돌입했다.<sup>249)</sup> 따라서 한국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중국의 태스크포스와 공동으로 연구하고,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관련 방안과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중 간 공동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할 때 유의할 점은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중국에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와 같은 현상 변경 과정이 중국의 강국화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면서 그러한 방안을 공동 연구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우선순위에 놓고 적극적인 중재자 혹은 추동자의 역할을 자임하게 될 것이다.<sup>250)</sup>

한편 스인홍(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관건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제시해 온 중요한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대규모 핵무기 감축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포기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한 치 타협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sup>251)</sup>

북미협상에서 관건적인 제재완화 문제는 한국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

249) 위의 책, p. 220.

25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우려와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이동률,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1호 (2019).

251) “미, 경제 제재 완화 않으면 김정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 『세계일보』, 2019.10.2.

은 제재완화 문제에서 협력할 공통 관심사와 이익이 존재한다. 한중은 미국이 한국과 관련된 금강산 관광과 중국과 관련된 북한 노동자의 귀환 기간 연장 등의 제재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비핵화의 초기조치인 협상 중 모든 핵 활동 동결과 핵무기신고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북미가 이 둘 사이 등가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한중이 이러한 제재 완화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옵션을 제시할 수 있다. 즉 한중은 미국이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와 일부의 제재완화를 교환하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반면 북한은 너무 낮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와 너무 많은 제재완화를 교환하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중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조금씩이라도 진전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만약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거나 장기간 지연된다면 중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의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중은 중장기적으로 대북제재 국면 하에서 북한과 어떤 경제협력과 평화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소통과 대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북한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이 전통적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 교류 강화와 전통적인 우방 러시아와의 교류 협력 강화라면 한국은 중국과 이러한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한 의미와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그 과정에서 한중이 북한을 매개로 하여 어떤 협력과 교류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에 함께 힘써야 할 것이다.

미중 갈등 속에서 대중 협력 방안을 살펴보자. 우선 중국 측 전문가들이 보는 미중 간 전략적 갈등의 구조적 원인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보는 미국의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 측은 미중 갈등에서 ‘트럼프 요인’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과 같은 국내 정치적 요인을 의식하여 대 중국 강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 측은 미중 갈등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선(善)’이라는 인식을 표출함으로써, 한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했다.<sup>252)</sup> 그리고 스인홍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대북제재에 있어 중국이 북한문제에 유용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중국은 미국에 협조했지만 2018년부터 중국이 쓸모가 없다고 판단한 이후 무역전쟁에 나선 것이라고 판단했다.<sup>253)</sup> 따라서 한국은 미중 갈등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기보다는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과 반미 연대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함께 한미중 소다자협의체를 만들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 3. 한미중 협력 방안: 한미중워킹그룹회의의 체계화와 정례화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우선 북미 협상과 별도로 한미중 협의체와 같은 소다자 협의체 구축을 시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항은 소다자 협의체의 대화기제가 명확한 의제와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지, 이러한 협의체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의제와 함께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협의체의 최종 목표가 관련국들의 합리적

252) 통일연구원-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중 전략대화 자료, 2019.7.10.

253) “미, 경제 제재 완화 않으면 김정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 『세계일보』, 2019.10.2.

인 안전과 이익에 대한 공평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중 협의체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하고, 공평하고 개방적인 협의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sup>254)</sup>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 회의와 별도로 한미중워킹그룹 회의 창설을 제안한다. 한미중워킹그룹 회의는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한미북중의 4자라는 데에 미중이 동의하기 때문에 북한을 제외한 3자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둘 수 있다. 한미중워킹그룹 회의의 구체적인 의제는 한미워킹그룹 회의 의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과 함께 남북중과 미국 4자의 협력 방안, 협력적위협 감소(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시행 방안,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이 의제가 될 수 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중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 개념 정의, 범위, 방식에 합의하는 것이고, 북한 비핵화의 단계 별 상응조치에 대한 등가성을 한미중이 논의할 수 있다. 한미중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써, 대북 적대시 정책 해소, 안전보장, 제도안전 보장, 북한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 제거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보장조치 방안이 마련되면,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유효성과 실행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한미중워킹그룹 회의에서 마련한 그러한 단계별 보장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단계별

---

254) 소다자 협의체에 대한 중국의 우려 사항은 통일연구원의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기관 방문 회의에서 중국측 참석자인 룡잉(榮鷹) 부원장의 발언을 요약. (통일연구원-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중 전략대화, 2019.7.11.).



비핵화 조치 방안을 가지고 미국이 대표로 북한과 양자 비핵화 실무 협상을 진행한다. 한미중워킹그룹 회의의 기능은 미국이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와 너무 낮은 수준의 제재완화를 교환하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반면 북한은 너무 낮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와 너무 많은 제재완화를 교환하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즉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한미중워킹그룹 회의가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의제에서 한미중이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한미중의 안보리 결의 이행 여부 상호 감독,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 조치 일부 완화 방안 마련, 안보리 결의에 스냅백 조항 삽입 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인센티브인 제재완화가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냅백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한미중은 워킹그룹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스냅백 조항을 삽입할지를 협의할 수 있다.

셋째, 북한 발전 문제와 남북중과 미국 4자의 협력 방안 문제이다. 북한 관련 제반 현안은 북한의 발전상황과 발전수요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비핵화와 평화구축 단계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은 불가피하고, 북한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중 주변국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미중 삼국은 북한의 발전상황과 발전수요에 대해 공동 연구하고, 평화체제 구축 단계에서 북한 개혁 개방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북한발전모델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모델과 미국의 자유시장경제 모델 사이에서 북한의 특수한 발전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국의 발전모델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마지막 의제는 CTR이다. CTR은 “핵, 화학, 생물무기 및 그 운반 수단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안보위협을 감축하기 위해 보유 대상

국에게 단계적/점진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교환해 나감으로써 위협을 감소하는 국제안보프로그램”이다.<sup>255)</sup> 특히 북한의 영변을 비롯한 여러 핵시설에 대해 공간전환 CTR을 위한 한미중 간 협력이 가능하다. 이는 영변과 같은 특정 핵시설의 해체와 제염 이후 이러한 공간을 평화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sup>256)</sup> 영변 핵단지 폐기 계획부터 중장기적인 공간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한미중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북한의 우라늄 광산 및 정련시설은 폐기하거나 평화적 목적의 시설로 전환할 것인지 결정하고, 원심분리기와 원자로 부품 생산설비는 민수용 기계 생산시설로 전환하며, 폐기 및 전환 대상시설 종사자 가운데 일반 작업자는 직업 전환 교육을 받은 후 개성공단 등의 민수용 시설에 재취업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심 연구 인력은 평화적 용도의 연구 과제를 부여하여 수행하도록 한다.<sup>257)</sup>

영변 핵시설의 공간적 CTR이 성공할 경우 북한의 다른 핵시설에 대해서도 각 시설의 비교우위를 면밀히 분석한 뒤 북한과 국제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전환하는데 한미중이 협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미중은 CTR에 대한 정책 방향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정례적인 소통기제로써 한미중워킹그룹 회의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중워킹그룹 회의에서 한국의 역할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기능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

255) 홍민, “영변 핵시설 폐기와 협력적 위협감소(CTR),” (통일연구원 정책토론회 자료, 2019.2.21.), p. 5.

256) 위의 글, p. 5.

257) 안진수, “영변 핵시설 현황과 폐기의 기술적 과정,” (통일연구원 정책토론회 자료, 2019.2.21.), p. 25.

사항은 한국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보다 한미동맹을 훨씬 더 중시하는 것이고, 반면 미국이 우려하는 사항은 한미동맹보다 한국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중시하면서, 한미일 전략 공조를 깨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중위킹그룹 회의를 체계화·정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포괄적인 합의와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미중 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이견을 좁히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 방안들을 한국이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유엔사 존속 여부 등의 이슈에서 미중 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중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한국이 한미중위킹그룹 회의를 통해 제시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박주화·윤혜령 편집.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01 평화·비핵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_\_\_\_\_.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04 해외평화협정』.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성기영 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실현과 국제협력』.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 신중호 외.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염규현. “미국의 <QDR 2010>과 전략적 유연성: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과 전략적 유연성 - 북미 이해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이어지나.” 『민족21』. 서울: 민족21, 2010.
- 윤영관 편. 『한반도 2022 비핵화·평화정착 로드맵』. 서울: 사회평론 아카데미, 2019.
- 정성운 외.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정성운·이수형·이무철.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파주: 푸른나무, 2007.
- \_\_\_\_\_.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론』. 서울: 백산서당, 2019.
- 평화·통일 연구소.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Hemmings, John, Ramon Pacheco Pardo, and Tat Yan Kong.  
*Negotiating the Peace: Diplomacy on the Korean Peninsula*.  
London: The Henry Jackson Society, 2018.

孙茹, 『朝核问题: 地区合作进程研究』. 北京: 时事出版社. 2009.  
崔志应, 『朝鲜半岛』. 上海: 同济大学出版社. 2009.

## 2. 논문

- 도경옥. “중전선언과 평화협정 2단계 구상의 의미와 과제.” 『통일정책 연구』. 제28권 제1호, 2019.
- 송승종. “중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7권, 2019.
- 신육희.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한국외교사 논총』. 제33집 제2호, 2012.
- 윤정원·나영주.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관한 미·중의 전략적 입장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5집 제2호, 2017.
- 이동률.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1호, 2019.
- 이수형.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계성.” 『통일과 평화』. 제2호, 2009.
- 이인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과 대책.”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2008.
- 이태환. “미국, 중국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종정책연구』. 제5권 제1호, 2009.
- 이희옥.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과 북중관계의 ‘재정상화’.” 『중소연구』. 42권 3호, 2008.
- 임수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한국정치연구』. 제18집 제2호, 2009.

- 장광현·최승우·홍성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UNC)의 전력 창출에 관한 연구: 현대전쟁을 통해 본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참여 배경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0권 제4호, 2017.
- 정한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쟁점과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30권 제2호, 2018.
- 조찬래,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사회과학연구』. 제18권 겨울호, 2007.
- 태형철, “조선반도비핵화과제와 <중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조미관계정상화>과제의 상관성에 대하여.” 『정경론집』. 제17호, 2018.
- 황지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1호, 2019.
- Wu, Jingjing.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Prospects.” *China International Studies*, May/June, 2019.
- 杨希雨, “朝鲜半岛的“安全困境”及其出路.” 『国际问题研究』. 제1기, 2018.
- \_\_\_\_\_. “中美关系中的朝核问题.” 『国际问题研究』. 제3기, 2015.

### 3. 기타자료

- 『경향신문』.
- 『국민일보』.
- 『국방일보』.
- 『노동신문』.
- 『동아닷컴』.
- 『세계일보』.
- 『아시아경제』.

『조선중앙통신』.

『톱데일리』.

『프레스리안』.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일보』.

*Brookings.*

*Korea JoongAng Daily.*

*The Diplomat.*

*The New York Times.*

*VOA.*

관찰자망 <<https://www.guancha.cn>>.

신화망 <<https://www.xinhuanet.com>>.

아산정책연구원 <<https://www.asaninst.org>>.

외교부 <<https://www.mofa.go.kr>>.

인민망 <<https://sd.peoplecom.cn>>.

제주 평화 연구원 <<https://www.jpi.or.kr>>.

중국 정부 <<https://www.gov.cn>>.

통일연구원 <<https://www.kinu.or.kr>>.

환구시보 <<https://www.huanqiu.com>>.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https://fas.org>>.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

Global Research <<https://www.globalresearch.ca>>.

Global Security <<https://www.globalsecurity.org>>.

Stars and Stripes <<https://www.stripes.com>>.

The Heritage Foundation <<https://www.heritage.org>>.

United States Forces Korea <<https://www.usfk.mil>>.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https://www.usip.org>>.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https://www.armed-services.senate.gov>>.

U.S. Department of State <<https://www.state.gov>>.

U.S. Department of Defense <<https://media.defense.gov>>.

U.S. Department of Representatives Document Repository <<https://docs.house.gov>>.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

38 North <<https://www.38north.org>>.

미국 측 평화협정 시안.

중국 측 평화협정 시안.

구갑우.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군사합의와 교류협력 분야의 성과와 과제.” (통일연구원 국제회의 자료, 2019.9.18.).

김상기·도경옥·구갑우·이혜정·이희옥·정옥식. “한반도 평화협정 구상.”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2018.12.12.).

김용현. “한반도 평화체제 체결 시 북한의 쟁점과 과제.” (통일연구원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2019.8.30.).

김주리.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KINU Insight』. no. 3, 2019.

문장렬.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 평가와 과제.” (통일연구원 개원 28주년 학술회의 자료, 2019.4.17.).

박병광. “북중동맹조약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소고: 한미동맹조약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6월호, 2012.

서보혁.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KINU Insight』. no. 6, 2019.

서재정.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와 미국.” (통일연구원 조찬간담회 자료, 2019.8.1.).

안진수. “영변 핵시설 현황과 폐기의 기술적 과정.” (통일연구원 정책 토론회 자료, 2019.2.21.).



- 우정엽.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 쟁점과 과제: 미국의 인식에 대해.” (통일연구원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2019.8.30.).
- 우준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 쟁점과 과제: 러시아.” (통일연구원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2019.8.30.).
- 이수형. “동북아 공동안보의 쟁점과 과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조적 연관성.” 『INSS 전략보고』. no. 41, 2019.
- \_\_\_\_\_. “전작권 환수 관련 유엔사의 입장과 우리의 대응방안.” 『이슈브리프』. 통권 146호, 2019.
- 조남훈. “북한 비핵화와 상응조치 전망.” (통일연구원 국제회의 자료, 2019.9.18.).
- 조성렬. 평화재단 전문가포럼 발제문, 2010.2.9.
- \_\_\_\_\_. “지정학의 도전과 원칙 있는 외교.” (통일연구원 조찬간담회 자료, 2019.8.1.).
- 진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중국의 입장.” (통일연구원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2019.8.30.).
- 통일연구원 워크숍 자료. (2019.10.14., 일본 쓰다주쿠 대학교).
- 통일연구원-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중 전략대화 자료, 2019.7.10.
- 홍 민. “북한 비핵화와 상응조치 방안.” (통일연구원 국제회의 자료, 2019.9.18.).
- \_\_\_\_\_. “영변 핵시설 폐기와 협력적 위협감소(CTR).” (통일연구원 정책 토론회 자료, 2019.2.21.).
- Snyder, Scott.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r: American View.” (통일연구원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2019.8.30.).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 2017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8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홍 민 외	7,0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2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임강택 외	12,0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19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홍 민	6,0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예의 함의(1부)	전병근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예의 함의(2부)	전병근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2017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3,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Study Series〉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2018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8-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8-02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이규창 외 14,000원
2018-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 외 10,500원
2018-04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이기태 외 9,000원
2018-05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이기태 외 8,000원
2018-06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현상백 외 12,000원
2018-07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이상신 외 11,000원
2018-08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조한범 외 8,000원
2018-09	북한의 주민 이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외 11,500원
2018-10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임강택 외 9,500원
20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진하 외 9,500원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홍제환 외 9,000원
2018-1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이우태 외 11,000원
2018-14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외 6,500원
2018-15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욱 외 10,000원
2018-16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총괄보고서)	김상기 외 5,500원
2018-17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정성윤 외 21,000원
2018-1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방안	이기태 외 12,000원
2018-19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홍 민 외 20,500원
2018-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김상기 외 10,000원

2018-21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양상 연구	한동호 외 14,000원
2018-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박영자 외 13,500원
20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오경섭 외 12,000원
2018-24	한반도 평화변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이 외 9,500원
2018-25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중호 8,500원
2018-26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신중호 외 12,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외
2018-02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18-03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보혁 외
2018-04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나용우 외

### 〈Study Series〉

2018-01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Cho, Han-Bum·Park, Ihn-Hwi
20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Rhee, Minkyu·Cho, Won-Bin
2018-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2018-04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Lee, Moo Chul·Lee, Soo-hyung
2018-05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Park, Young-Ja et al.

## 2019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욱, 안준형 8,500원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연, 김주리 8,000원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종호 외	18,000원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9-22-01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2019-22-02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 민 외	21,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정은이 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장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 〈Study Series〉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	--	----------------

-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 · Baek, Sangme
-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 · Park, Juhwa

##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도경옥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2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10,000원

## 기타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욱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7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락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통일연구원

값 8,000원



ISBN 978-89-8479-964-6